2025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

통일부

발 간 사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는 식민의 어둠을 걷어 내고 광복의 빛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내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최초의 국가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통일'입니다.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무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통일·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정권 유지에 골몰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핵·미사일과 파병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첫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우리 재산권 침해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주도의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을 한반도 전역에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다양한 국제협력 계기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힘썼습니다. 북한 당국에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여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완전히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착', '역량', '화합'의 3개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 정착을 넘어 통일 준비의 주체로서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일상 속에서 통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지를 결집했습니다.

『2025 통일백서』에는 한반도 통일 미래를 향한 많은 노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80년 전,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나 광복이라는 빛을 가져온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5 통일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면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통일부장관 **김 영 호**

Contents

발간사 2

제1장 통일·대북정책 추진

제1절 정책 추진 환경 16

제2절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19
1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19
2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21

제3절 「8.15 통일 독트린」 25
1 새로운 통일담론 모색 25
2 「8.15 통일 독트린」 의의 및 내용 28
3 「8.15 통일 독트린」 이행과 국내외 확산 35

제2장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44
1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44
2 국민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 협력 46
3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강화 51
4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55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60
1 이산가족 현황 60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61
3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 절차 개선 67

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68
1 현황 68
2 문제 해결 노력 69

제4절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 79
1 수해 지원 제의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노력 79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협업 80
3 대북 인도적 지원 기반 조성 노력 81

제3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90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운영 90
2 건강 증진 및 정서 안정 96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00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103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정착지원 정책 강화 105
1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개최 105
2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계기 정착지원 정책 강화 107
3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망 구축 112

제3절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일자리 지원 116
1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116
2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119

제4절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정착지원 거버넌스 강화 126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126
2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127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132
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133

제4장 통일기반 조성

제1절 국민 공감대 확산 **140**
1 통일문화 확산 노력 140
2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142
3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144
4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147
5 통일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150
6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51

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157**
1 주요국 정부·의회 및 주한 공관 협력 강화 157
2 국제회의 개최 및 통일공공외교 강화 163

제3절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171**
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171
2 북한정보포털 활성화 172
3 북한자료센터 서비스 확대 173

제4절 통일법제 기반 구축 **177**

제5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179**
1 남북협력기금 수입 179
2 남북협력기금 지출 180

제5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188**
1 통일교육 방향 정립과 협력체계 구축 188
2 통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189
3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196
4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운영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201
5 통일교육연구센터 활동 강화 203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05**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05
2 학교 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206
3 대학 통일교육 지원 207
4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09

제3절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211**
1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211
2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214
3 지역 통일관 운영 활성화 217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219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21**
1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체험연수 확대 222
2 통일체험연수 대상 다양화 223
3 계기별 특별행사 기획·추진 224
4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25
5 시민 친화적 시설로 전환 및 인프라 개선 227

제6장 남북관계 기반 정비

제1절 남북대화 재개 노력 **234**
①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234
②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추진 235
③ 남북대화 대응 역량 강화 235
④ 남북회담사료 대국민 공개 236

제2절 남북 간 협력 기반 형성 **237**
① 평화경제특구 추진 237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효율화 추진 239
③ 주요 경협기업 지원 및 소통 강화 240
④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241

제3절 법·제도에 기반한 교류협력 관리 **243**
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대응 243
② 질서 있는 교류협력 관리 및 관련 제도 정비 244
③ 대북제재 이행 및 관리 강화 245
④ 중앙정부-지자체 간 교류협력 협의·조정 추진 246

제4절 사회문화교류 추진 기반 조성 노력 **248**
①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248
②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249
③ 종교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251
④ 기타 교류 추진 252

부록 APPENDIX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 **256**

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266**
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266
② 이산가족 현황 267
③ 남북 왕래 인원 현황 270
④ 남북교역액 현황 271
⑤ 개성공단사업 현황 272
⑥ 인도적 협력 현황 273
⑦ 남북회담 추진 현황 274
⑧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75
⑨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284
⑩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285
⑪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286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88**
① 기금 조성 실적 288
② 기금 사용 실적 290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292**

찾아보기(INDEX) **294**

01

통일·대북정책 추진

제1절 | 정책 추진 환경

제2절 |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제3절 | 「8.15 통일 독트린」











제1장
통일·대북정책 추진

2024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분쟁 격화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동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이하 'GPS') 전파 교란, 소음방송 송출 등 여러 영역에서 대남 도발을 전개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2023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과 '민족'을 지우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한편,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10월에는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도로의 북측 구간을 폭파하였다.

한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였다. 북한은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 군사협력을 명문화하였으며, 10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헌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서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 아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총체적 접근(3D)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통일·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하는 등 인내심을 갖고 남북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하였다.

제1절 정책 추진 환경

북한은 2019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을 봉쇄한 이래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왔으며 특히,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12.26.~30.)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과 '민족' 지우기에 나섰다.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1.15.)에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평화통일', '동족, 동질관계' 등의 상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재물을 청산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철거되고, '통일'과 관련된 표현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 조직 차원에서도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 대남기구가 폐지되었으며, 통일전선부 명칭도 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남북 간 단절을 위한 물리적 조치도 취하였다. 특히, 10월에는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도로의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실제로 폭파하고, 11월에는 경의선 군사분계선 이북의 송전탑을 철거하였다.

한편,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1.5.~12.)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작업을 지속하였다. 2024년 북한은 13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5월에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였고, 10월에는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5월부터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6천 개가 넘는 대남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소음방송 송출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유발하였다. 아울러, 9월에는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하면서 핵능력을 과시하고 우리를 향한 핵 위협도 지속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기점으로 한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는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24년 6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이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그동안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정당화하고자 하였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10월에는 1만 1천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전투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였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 정권은 외부로의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내부 체제 결속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였다. 2월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가계소득과 식량·생필품을 포함하여 생계유지를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외부로 향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북한 내부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와 접촉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주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2024년은 1994년 8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되

는 해로 그동안 국제 정세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한인권 상황 악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등 통일·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역대 정부가 계승하여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과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79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제2절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 남북관계의 현안 발생 시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1.16.)를 통해 직접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통일부장관도 공개 행사 발언, 언론 인터뷰를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이러한 행동은 "한민족으로서 남북이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2.16.)하고 "역사적, 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3.8.)하였다.

북한이 5월 28일 오물·쓰레기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남 복합 도발을 자행한 데 대해 정부는 5월 31일 입장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한 데 대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6.4.)와 대북확성기 방송 실시(6.9.)를 결정하였

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2023년 11월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이 9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비핵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9.13.)하였다.

북한은 10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며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남북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10.15.)하였다. 또한, 정부는 10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10.31.)하였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 밀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규모의 전투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였다. 정부는 10월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발표하는 한편,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10.18.)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10.22.)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10.22.)하면서 "수천 명의 젊은 북한 병사들을 명분이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그 사실을 주민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규탄(11.14.)하였다. 또한, 정부는 미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남북 간 연락 수단이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는 브리핑, 기자 간담회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에 남북대화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특히,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어떠한 문제라도 협의할 수 있는 남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공식 제안함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도 여러 계기에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8.15.)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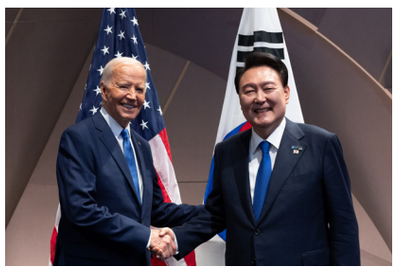
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협

상을 거부한 채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 가동을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 접근(3D)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정부는 「담대한 구상」 가동 여건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2024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7월 1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국방부 간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및 한미 핵협의그룹(이하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평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미는 제3차 NCG 회의(6.10.) 및 NCG 모의연습(9.5.~6.)을 통해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등 핵억제 관련 논의를 진전시켰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7.11.)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통로인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와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협력하에 대북 독자제재를 총 9차례 실시하였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해체(4.30.)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설립(10.16.)하였으며,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북제재 감시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담대한 구상」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상외교 차원에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4.23.), 한-뉴질랜드 정상회담(9.4.),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9.30.), 한-필리핀 정상회담(10.7.),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11.25.) 등 개최 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담은 공동성명 문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정부는 8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신규 가입, 9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통일부는 유엔사 회원국 대사 라운드테이블 강연(1.31.) 및 통일부차관-유엔사 부사령관 면담(5.10.)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실상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통일부장관과 차관은 공개 행사 연설, 언론 인터뷰, 강연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통일부는 '미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11.26.)하여 미국 대선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핵문제 전망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에는 국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미북 관계를 전망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비핵화 문제 등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미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11.26.)

제3절 「8.15 통일 독트린」

① 새로운 통일담론 모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자유, 평화, 번영'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으며,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제 정세, 남북관계 상황, 국민적 요구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전략의 수립을 2024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2024년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며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부합하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부는 국민 각계각층과 지역사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통일부장관이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요일마다 정례 개최하는 조찬 간담회인 '수요포럼'을 14회 개최하였고, 만찬 간담회인 '통일이 있는 저녁'을 1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또한, 외교안보원로 오찬, 청년인턴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치·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외교안보원로 오찬(4.15.)



청년인턴 대상 의견 수렴(6.10.)

청취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전라 지역, 경상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5개 권역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통일부장관이 직접 지역사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통일정책과 북한 실상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라 지역 의견 수렴(5.27.)



경상 지역 의견 수렴(5.31.)

한편, 통일미래 전략·정책에 대한 통일부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 및 위원장단회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통일부는 학회,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통일부장관은 2월 통일외교안보 분야 4대 국책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특별좌담회(2.5.)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대학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학회 및 연구기관과도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년 특별좌담회(2.5.)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4.19.)

정부는 국내 의견 수렴과 함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도 병행하였다. 통일부장관은 3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과의 면담에 이어 4월에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통일·대북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면담(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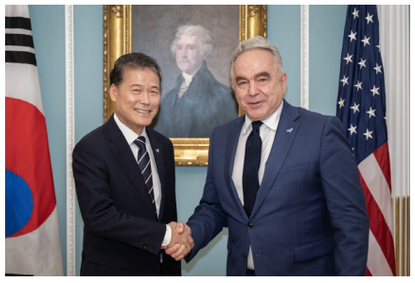
6.25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 초청 정책 설명회(4.5.)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월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7월에는 통일부장관이 미국을 방문,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개최하여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을 포함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통일부차관도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4.30.~5.1.)를 통해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4.30.~5.1.)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7.21.~26.)

② 「8.15 통일 독트린」 의의 및 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헌법적 책무에 의거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의 수립과 발표는 국제 정세 변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통일 부정, 북한 내부의 변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짐에 따라 자유에 기반한 연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면서 자유·인권·법치를 비롯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건한 안보태세와 함께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면서, 미완의 역사적 과제인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만 한다.

아울러,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이 서서히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내부적으로는 1994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수립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수립된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은 과거 통일 구상이나 선언과 비교하여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다.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 구성원 개개인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8.15 통일 독트린」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 간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갈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추진 과정에서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맹국, 우방국과 공고한 가치 연대를 토대로 역내 유관국 및 국제사회에 상호 윈-윈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지향점 아래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인 통일 비전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인 차원에서 통일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가능하게 한다. 통일은 분단이 만들어낸 자유의 단절, 안전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한반도 구성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 특히, 북한 주민은 통일을 통해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국운 융성의 미래 국가발전 전략으로 기능하며 대한민국을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통일이 달성됨에 따라 경제영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더욱 큰 기회와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 세계 차원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폭제가 되는 세계사적 쾌거가 될 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정의와 법치가 구현된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고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된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첫 번째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이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다. 세 번째 전략은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유 통일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통일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북한인권 개선, 인도적 지원,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대화, 국제협력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8.15.)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 특히 통일 시대의 주인인 미래 청년세대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 또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등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미래 청사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논의의 장도 활성화할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의 전개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북한 주민의 자유 촉진과 인권 보장은 헌법적 책무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2026년 완공될 예정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실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리고, 북한인권 담론을 대내외에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이다. 그간 정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 도구를 포함한 물품 지원을 제안(2022.5.16.)하였으며, 2024년 8월에도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홍수나 가뭄, 전염병을 비롯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 지원을 추진하며,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이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와 자격이 있으며, 북한의 미래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선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비롯하여 북한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실태 평가,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 미래세대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시작되며,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지식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정부는 7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7.14.)을 통해 제시한 정착, 역량, 화합의 3개 분야 10대 과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지식이 한반도의 통일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닌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상향식(Bottom-up)으로 남북 간 관심사항에 대해 어떠한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를 견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내기 쉽지 않다. 또한,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한반

「8.15 통일 독트린」 체계도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3대 통일 비전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3대 통일 추진 전략	**국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연대와 지지 확보
7대 통일 추진 방안 (Action Plan)	①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③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④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⑤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⑥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⑦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		

도 국제 포럼」을 확대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였으며, 앞으로 이 포럼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는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통일 대한민국이 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방국과 역내 유관국을 대상으로 우호적 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③ 「8.15 통일 독트린」 이행과 국내외 확산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이를 범정부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정부는 통일부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9.4.)하여 범정부 차원의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와 공론화 계획을 논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구현은 통일부만의 과업이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추진해야 할 범정부적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8.15 통일 독트린」 공론화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부장관을 시작(10.2.)으로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차원에서 통일 키워드를 선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SNS 기반 참여형 챌린지'를 진행하였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9.4.)



통일부장관 SNS 기반 참여형 챌린지(10.2.)

또한,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국내외 확산을 위해 독트린의 의미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출입기자단(8.16.)과 외신기자단(8.22.)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공무원, 학계 전문가, 종교계 인사 등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통일부 간부도 지역별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기회의 등을 계기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였다. 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함께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8.15 통일 독트린」 지역설명회도 개최하였다. 한편, 독트린의 배경, 의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 소책자와 리플릿을 발간하고, 전문가, 정부기관, 국회,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공관에도 배포하여 「8.15 통일 독트린」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관련 온브리핑(8.16.)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8.22.)



「8.15 통일 독트린」
소책자(국문)



「8.15 통일 독트린」
소책자(영문)



「8.15 통일 독트린」
소책자(일문)



「8.15 통일 독트린」
소책자(중문)

정부는 학술적 차원에서도 「8.15 통일 독트린」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부는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8.28.)하여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평가를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며, 독트린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10.16.)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추진, 정보·자료 공유, 공동 학술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미래연구단과 정례회의 개최 등 통일과 북한 문제 연구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협약 후속 조치로서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11.25.)하여 산하 통일미래연구단의 15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이 분야별 통일미래상과 이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국제학술회의(8.28.)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11.25.)

정부는 정상 차원의 양자회담과 다자회의를 계기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1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11.15.)에서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정상회담(9.4.),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9.30.), 한-필리핀 정상회담(10.7.), 한-아세안 정상회의(10.10.), 한-페루 정상회담(11.16.),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

담(12.3.) 등 양자 정상회담과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10.10.)



한미일 정상회의(11.15.)

통일부 차원에서도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에서 밝힌 대로 기존 「한반도 국제 포럼」을 확대·발전시켜 「국제 한반도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9.3.)하고, 11월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해외 세미나를 개최(11.20.)하였다.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함께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영국·벨기에·헝가리),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동남아시아(필리핀·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각국 정부·의회·연구기관과 현지 국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그 취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통일부차관은 주한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9.23.)하여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와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02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제1절 |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제2절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제3절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제4절 |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











제2장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자 동포애적 사안으로 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는 MZ세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패널, 장소, 형식 등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유지태 배우를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함께 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립북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외부정보 통제, 강제북송,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 이슈를 심층 분석한 내용 등을 새롭게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국문과 영문, 그리고 영상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최초로 해외에서 2차례 개최(7월 미국 워싱턴DC, 10월 스위스 제네바)하였다. 북한인권 문제 관련 주요국과 협력도 강화하였는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10.18.)를 개최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협력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앞당겨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산의 아픔을 위로·치유하기 위해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9.15.)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하였고,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와 연계하여 6개 권역별 주요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춘천, 목포)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의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해 「2024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공개(2.3.)하고,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 억류 4천 일을 계기로 통일부장관과 미국 국무부, 캐나다 외교부가 함께 '한국인 억류자 송환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주요 계기마다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주요 국가와 연대 및 협력을 확산하였다.

정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월 북한 신의주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관련 긴급지원을 제의(8.1.)하고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 목적으로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하는 등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자 하였다.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아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는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 준비를 지속하였다.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①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정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인 '북한변화 유도'를 위해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의 통일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공론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북한인권-안보-통일' 연계 설명 논리를 정교화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리플릿(「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될 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가까워집니다」)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관계 부처, 국회,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7.1.)하였다. 리플릿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이 처한 현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와 전 세계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보편적 국제규범에 따라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때, 무기 개발이 아닌 민생 개선에 힘쓰는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이 전환될 것이며, 이는 곧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2023년 6년 만에 북한인권을 의제로 한 공식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4년 6월 12일 공식회의에서도 북한인권과 국제평화·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었음을 주목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등 동 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상 핵심기구이지만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국회에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7.31., 11.18.)하였고,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및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 민간자문기구인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3.12.)하고 운영하였다. 총 4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3.12., 6.11., 9.11., 12.10.)하여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계기로 '북한 아동 강제노동 실태 및 개선',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정부 권고사항', '국립북한인권센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 기고·인터뷰를 진행하고 세미나에도 참여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정책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1.22., 8.29.)하였다. 1월에는 2023년 12월에 발표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입각한 부처별 2024년 북한인권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고, 8월에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는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논의하였다.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국회에 보고(8.30.)하였다.



북한인권-안보-통일 연계 설명 리플릿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전체회의(3.12.)

② 국민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 협력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지태 배우를 북한인권홍보대사(2024.6.27.~2025.6.26.)로 위촉하였다. 유지태 북한인권홍보대사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영상보고서 내레이션,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영상 에세이 내레이션,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7.22.~23.) 기조연설 및 특별세션 패널 참석 등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유지태 북한인권홍보대사 위촉식(6.27.)

정부는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전달하고 관심을 모으기 위한 기회도 마련하였다. 젊은 세대가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를 개최하였다. 7월에는 '클래식, 북한인권을 연주하다', 8월에는 '거부할 수 없는 상상의 자유, 쉿... 북한 내 한류 확산', 9월에는 '2030 디자이너들의 북한인권 형상화', 11월에는 '북한인권, 두 개의 사선을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평가회 워크숍(12.6.)을 통해 젊은 세대의 북한인권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음악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신진학자 등 다양한 패널의 참여와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적극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북한인권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실제 탈북 과정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1.31.)를 열어 청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실상을 전달하였다. 상영 후에는 영화에 출연한 김성은 목사와 통일부장관이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12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일(12.18.)을 계기로 남북여담(南北女談)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과 탈북여성(작가, 유

「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

구분	개최일	주 제
토크콘서트	7.26.	클래식, 북한인권을 연주하다!
	8.27.	거부할 수 없는 상상의 자유, 쉿... 북한 내 한류 확산
	9.27.	2030 디자이너들의 북한인권 형상화
	11.25.	북한인권, 두 개의 사선을 넘어 희망으로
워크숍	12.6.	평가회 워크숍



「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 1차 토크콘서트(7.26.)


「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 2차 토크콘서트(8.27.)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1.31.)


남북여담(南北女談) 토크콘서트(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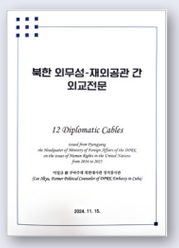
튜버, 봉사단체 대표)을 패널로 초대하여 북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차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문가, 학자 등이 주체가 되는 세미나, 학술회의와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인권 문제를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26.)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고문피해자 간담회(6.25.)를 실시해 북한에서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청취하고, 북한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호소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겪었던 처참한 고문과 가혹행위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책임 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이어갔다.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11월에 개최(11.15.)하고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국내 유관부처, 학계,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행사에 특별 초대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10.28.~29.)에서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11.15.)



북한 외무성-재외공관 간
외교전문(책자)

을 배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 대응 동향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를 전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사례와 실상,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은 사진, 그림, 증언 등 26개 콘텐츠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활용하였다. 6월(서울)과 9월(인천) 통일문화 공감행사 시 '북한인권존' 등에 전시되었으며, 7월 '북한인권 서울포럼'(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생애를 담은 작품 전시회(충청남도)에도 활용되었다. 또한, 11월 '통일로 한걸음, 글로벌 평화통일 청년놀이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11.16.) 시에도 활용되었다. 2023년 9월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시설인 인권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총사업비 260억 원 중 46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먼저, 1월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2,644㎡ 규모의 인권센터 건립 부지를 확정하였다. 4월에는 건축설계사, 공간디자이너, 전시기획자, 인권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를 발족(4.18.)하고, 건축설계와 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구해 인권센터 건립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모로 선정된 설계업체를 통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설계를 시작하였으며, 12월 말까지 건축설계 3단계 중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만 남은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전시 콘텐츠 내용 및 전시기법 등이 포함된 '국립북한인권센터 콘텐츠 구성·운영 방안 연구 및 기획' 연구용역도 진행하였다. 한편, 9월에는 인권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TF팀을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3년에 이어 민간단체 공모 방식으로 북한인권 증진 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4.18.)



국립북한인권센터 조감도

동 지원 사업을 실시해 시민사회와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4년 1월 한 달간 공모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9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총 18억 원을 지원하였다. 보조사업을 수행한 19개 단체는 5건의 국제협력, 4건의 문화·예술, 5건의 콘텐츠 개발, 4건의 실상 알리기, 1건의 학술행사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사업을 통해 29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오페라·연극·뮤지컬 등 문화예술 공연을 29회 개최하였으며, 민간단체들이 유엔·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 북한인권 증진 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7월에는 국내에서,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대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등 국고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북한 UPR 참여(11.4.~9.)



오페라 '냉면' 공연(11.27.)

③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강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만큼,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역시 남북 간 문제를 넘어 국제적 이슈로 접근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루마니아(4월), 뉴질랜드(9월), 체코(9월), 슬로바키아(9월), 필리핀(10월), 말레이시아(11월) 등과 정상급 외교에서도 북한인권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79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11.7.)에 참가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는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대한민국과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발표가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5년 만에 열린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11.7.)에서 사전질의를 통해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질의하고 고령화에 따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두 권고를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북한이탈주민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반동

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 또는 개혁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와 긴밀히 소통하고, 북한이탈주민 면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방문 등 북한인권 조사 활동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유사 입장국, 국제 NGO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공조 관계를 굳건히 하였다. 6년간 가동되지 않다가 2023년에 재개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4.15.)를 통해 미국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강제 북송, 인권-안보 연계, 책임 규명과 기록 등 북한인권 관련 한미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북한인권 관련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였다.

10월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10.18.)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3자회의에는 한국의 통일부장관 및 주미 대사,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주미 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 접근, 책임 규명,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3자회의에 이어 실시된 '북한인권 생존자와의 공개 세션'에서는 한미일 3국 대표단, 독일·스웨덴·영국·유럽연합(EU)·캐나다·필리핀·호주 등 옵서버 국가대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북한인권 참상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공개 세션 이후에는 미술·음악 등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탈북예술인 4인의 작품 전시와 공연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예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미국 북한인권특사,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 세계기독연대 대표단,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전·현직 회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최초로 해외에서 2차례 개최하였다. 7월 미국 워싱턴DC 행사(7.22.~23.)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민주주의진흥재단(NED)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유지태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 고통에 눈 감지 말고 행동해 달라"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탈북청년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10월 행사(10.28.~29.)는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해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공론화하고 연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동 행사에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공개된 외교전문을 통해 국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2.21.)



올로프 스코그 EU인권특별대표 접견(10.14.)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7.22.~23.)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10.28.~29.)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북한 최고지도자가 그 대응 방향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북한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인권 정책 설명회'(2.15.)를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주한 외국공관(15개국) 및 북한인권 국제기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우선순위와 북한 당국과 인권 관련 협의를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북한인권 정책 설명회(2.15.)

한편,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4.26.)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추가로 반영한 후속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 여아의 날(10.11.)'에는 통일부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모녀 및 주한 여성 외교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10.10.)하였다. 간담회에는 북한인권 실상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 모녀가 참석해 북한인권 실상과 정착 과정의 경험을 전하고, 유럽연합(EU)대표부·과테말라·체코·콜롬비아·헝가리 등의 여성 외교관들이 함께해 북한 여아의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4.26.)



북한이탈주민 모녀 및 주한 여성 외교관 초청 간담회(10.10.)

④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1) 북한인권 조사·기록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이 겪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조사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상

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문답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된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 조사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북한 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이산가족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8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였다. 2024년 조사대상자는 총 228명으로, 2024년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220명(여성 199명, 남성 21명)과 2024년 이전에 우리 사회에 정착한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8명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조사대상자는 2023년 141명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2024년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8%, 남성이 12%이며, 출신 지역별로는 양강도(35%), 함경북도(29%), 평양시(7%) 등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는 총 227건으로, 기록 원본은 향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로 이관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기록을 위해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실태조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정부는 2017년부터 북한인권 실태 주요 조사 결과를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에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해 왔다.

2023년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국제인권 규범과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였다. 이어서 2024년에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2023년에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더하여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6.27.) 하였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외부정보 통제, 강제 북송,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인권침해 이슈를 심층 분석하였고, 특별사안으로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다루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기준으로 권리별 침해 실태와 통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침해 사례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 종합보고서(좌) 요약보고서(중) 영상보고서(우)

특히,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기존 책자 형태의 '종합보고서' 외에도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하였다.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을 담았으며, 영상보고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설과 영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국문본을 6월 27일 내외신 언론설명회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발간 당일 통일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정부부처, 학술·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특히, 동 보고서는 별도 제작한 'QR페이지'를 통해 전자책(e-book) 바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9월 10일에는 국제사회에도 북한인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주한 외국공관 북한인권 설명회' 행사를 통해 영문본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영문본 보고서도 발간 직후 재외공관, 국제기구, 국내외 연구소 등에 배포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보고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지태 북한인권홍보대사,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보고서 발간 시 내외신 언론설명회(6.27.)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언론 인터뷰, 카드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영상보고서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K-컬처스크린'에 송출(7.1.~31.)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강연(7.10., 10.23.)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인권 전문가를 초청한 '라운드테이블'(11.22.)을 개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7.22.~23., 워싱턴D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상 브리핑(7.25., 뉴욕) 등을 통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적극 홍보하였다. 이 밖에도 주한 외국공관(9.10.), 세계기독연대(CSW) 대표단(9.11.) 등을 대상으로 영문보고서를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주요자료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시 여러 나라에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 강제 북송,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부 사형 관련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3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3월), 2023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4월), 유엔사무총장 북한인권상황보고서(8월) 등에서도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보고서』를 소개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였다.



K-컬처스크린 영상보고서 송출(7.1.~31.)


주한 외국공관 대상의 북한인권 설명회(9.10.)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①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하 '남북이산가족찾기', reunion.unikorea.go.kr)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3만 4,291명이다. 이 중 9만 7,350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3만 6,941명이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2024년 12월 말 기준)

①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합계
인원	11,349	12,845	6,827	3,751	2,169	**36,941**
비율	30.7	34.8	18.5	10.1	5.9	**100**

② 출신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합계
인원	7,305	3,794	2,155	3,309	1,125	1,140	544	17,569	**36,941**
비율	19.8	10.3	5.9	9.0	3.0	3.1	1.5	47.5	**100**

③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22,549	14,392	**36,941**
비율	61.0	39.0	**100**

④ 거주지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	9,339	1,538	898	2,958	360	767	305	11,175	2,236	1,253
비율	25.3	4.2	2.4	8.0	1.0	2.1	0.8	30.3	6.0	3.4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합계**	
인원	1,181	634	539	1,145	934	392	149	1,138	**36,941**	
비율	3.2	1.7	1.4	3.1	2.5	1.1	0.4	3.1	**100**	

현재 생존해 있는 신청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3만 1,021명(84.0%)이며, 평균연령은 83.5세이다. 2024년 한 해 2,959명의 신청자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만큼,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②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1)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 2024년 8월 「8.15 통일 독트린」, 2024년 9월 「제2회 이산가족의 날」 윤석열 대통령 축사 등을 통해 계기 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이어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6조에 의거한 법정조사로 이산가족 1세

대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당초 5년으로 되어 있는 조사 주기를 시행령 개정(7.2.)을 통해 3년으로 단축하여 2024년에 조기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크게 전수조사와 심층 설문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생존해 있는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소와 연락처, 가족 사항 등 이산가족이 신청 당시 기재한 필수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현행화하여, 향후 이산가족 교류 시 활용될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내 전수조사 참여자 중 5,10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산가족 교류 실태와 정책 인식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국내 거주 이산가족은 생사 확인 62.3%, 상봉 희망 57.2%, 서신·영상편지 교류 52.1%, 고향 방문 43.0% 순으로 교류사업 참여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심층조사 결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관련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전면적 생사 확인(77.2%),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37.5%), 서신 교환(18.2%)을 선택하였다. 한편,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 의사를 타진하여 1,351명의 신규 이산가족찾기 신청 의사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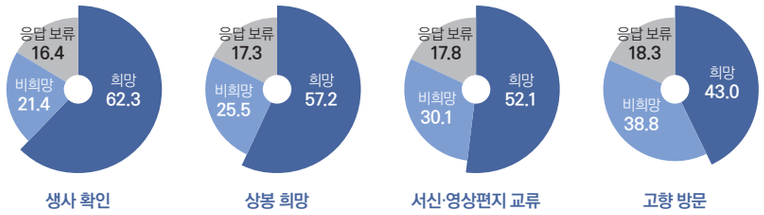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하여 세 가지 검사(상염색체,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112명에 이어 2024년에는 1,525명을 검사하였으며, 최초로 해외 이산가족도 유전자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사 인원은 총 2만 9,319명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는 2015년 구축한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그동안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잔여 유전자 검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검체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각각 20편의 영상편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2024.7.2.~12.15.) 결과

• **정보 현행화 조사(전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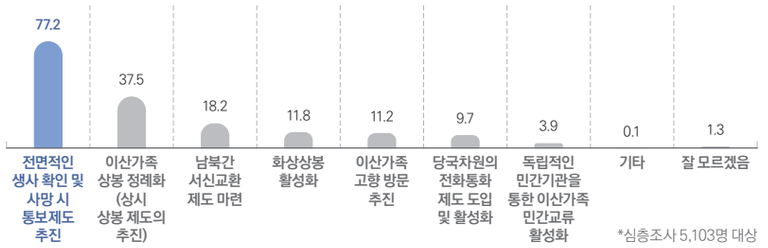
– **(국내 거주 이산가족)** 신청자 3만 5,542명 대상 현행화 결과, 3만 2,797명 확인(92.3%)
– **(해외 거주 이산가족)** 신청자 475명 대상 현행화 결과, 118명 확인(24.8%)



*국내 거주 이산가족 신청자 2만 5,282명 대상

• **정책수요 조사결과**

– **(이산가족 교류사업 참여 희망)** 생사 확인 62.3% 〉 상봉 희망 57.2% 〉 서신 교류 52.1%
– **(가장 시급한 정책)** 전면적 생사 확인 77.2% 〉 상봉 정례화 37.5% 〉 서신 교환 18.2%



*심층조사 5,103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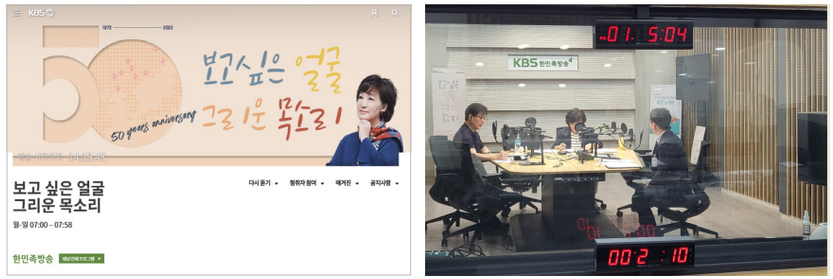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체 채취(6.14.)



해외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10.21.)

지를 제작하여 시범 교환하였다. 이후,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상편지 제작을 재개하였다. 2024년에 1,002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제작 편수는 2만 7,102편이다. 이중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영상편지는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한반도,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과 협업하여, 2022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이산가족 영상편지의 음성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는 「KBS 가요무대」를 통해 매월 1회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대하여 생사 확인 시 300만 원, 상봉 시 600만 원, 서신 교환 등 교류 지속 시 8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3년 민간 차원에서 생사 확인 1건이 성사되어 3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민간 차원에서 상봉이 1건 성사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과 일반 국민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사연을 담은 웹툰 및 영상물과 북녘 고향 사진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 이산가족 위로사업 추진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3년 3월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음력 8.13.)하는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9.15.)하였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통일부장관, 국회의원, 이산가족 및 유관기관 관계자 3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가 이산가족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산가족의 날」 기념전시 '희미한 기억, 짙은 그리움' 전을 9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하여 「이산가족의 날」을 홍보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위로하는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9.15.)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고령 이산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별·세대별 찾아가는 위로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통일부장관은 설을 맞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경모행사에 참석(2.10.)하여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추석 명절에는 고령 이산가족의 가정을 위로 방문(9.13.)하였다. 통일부차관도 고령의 이산가족을 방문·위로(12.30.)하였다. 또한, 9월에는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9.15.)과 연계하여 6개 권역별 주요 도시, 수도권(서울, 인천)·강원권(춘천)·충청권(대전)·호남권(목포)·영남권(부산)에서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동시 진행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2월에는 2~3세대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견학과 이산가족 정책 설명회를 1박 2일로 진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를 선정하여 이산가족정책 세미나, 홍보 콘텐츠 제작, 형편이 어려운 이산가족 지원, 이산가족 소식지 발간 등 사업을 지원하였다.

통일부장관, 설 계기 망향경모제 참석(2.10.)

통일부장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위로 방문(9.13.)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9.15.)



2~3세대 이산가족 초청 정책 설명회(12.5.~6.)

③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 절차 개선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 여부를 직접 확인해 오고 있으며 2023년 2회, 2024년에는 3회 진행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근거를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3년 4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2023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관할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를 북한에서 인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을 개정(4.11.)하여 북한 주민의 사체 유전자 검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① 현황

미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생포되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군인을 일컫는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탈북 귀환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하여 귀환하였다.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전쟁 중 납북자(이하 '전시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이하 '전후납북자')로 구분된다.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작성된 납북자 명부 등을 토대로 전시납북자 전체 규모를 10만 명 내외로 추정하였다. 위원회에서 전시납북자로 최종 결정한 인원은 4,777명이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납북피해 신고 홍보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된 납북피해 사건은 5,505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후납북자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35명이며, 그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고, 9명은 200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하였다. 정부는 2024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2024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KAL)납치	군·경	기타	합계
피랍자		3,729	50	30	26	**3,835**
귀환자	송환	3,263	39	-	8	**3,310**
	탈북·귀환	9	-	-	-	**9**
미귀환자		457	11	30	18	**516**

북한은 2013년 김정욱 선교사에 이어 2014년에는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를 억류하고 이들의 재판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하였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6명이다.

② 문제 해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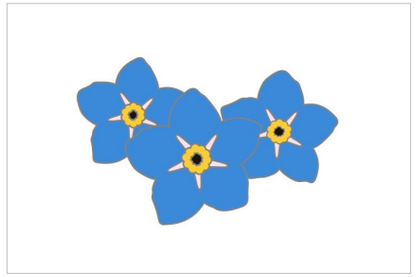
정부는 국내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이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내 공감대 확산

우선, 국내 차원에서는 '세송이물망초' 상징 제작 등 누구나 쉽게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확대하였다.

정부는 2024년 2월 3일 「2024 서울패션위크」 패션쇼 무대에서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공개하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처럼 납북피해자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세송이'는 각각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를 의미한다.



'세송이물망초' 상징



「2024 서울패션위크」 Runway Show(2.3.)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회의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였으며, 같은 날 국군포로·납북자 가족과 단체에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전달하면서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아울러, 주요 계기마다 시민사회의 동참을 통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납북피해자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였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세송이물망초' 배지 패용 캠페인에 많은 호응을 보였으며, 독일·아르헨티나·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배지 패용에 동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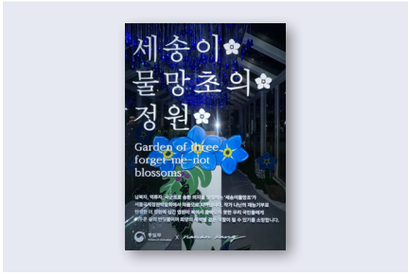


통일부장관, 납북자 가족 대상 배지 전달식(3.26.)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배지 패용(5.3.)

5월부터 10월까지는 서울시 주관으로 뚝섬 한강 공원에서 진행된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작품을 설치·전시하였는데, 동 기간 중 서울시 추산 780여만 명이 방문해 이를 관람하였다. 국내 1호 원도우페인터인 '나난 강' 작가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해당 정원을 배경으로 납북피해자 가족 편지 낭독회, 사진전, 피아노·소프라노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문화콘서트(5.29.)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였다. 6월에는 2014년 북한 억류 전 가족과 화목하게 지냈던 모습과 2024년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모습을 AI 기술로 구현하고, 유엔 공용어 등으로 번역해 통일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재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북한에 억류 당시의 모습과 대한민국에 송환되었을 때의 가상 모습을 AI 기술로 구현하여 대한민국





억류 선교사 송환 촉구 광고영상(6월)



억류 선교사 송환 촉구 광고영상(11월)

역사박물관 전광판 등을 통해 상영하였다.

정부는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납북피해자 가족을 추가로 찾아 보상하고, 고령 귀환납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월부터 8개월간 부처 협업(통일부·경찰청)을 통해 과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납북자 가족의 소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찾지 못했던 전후납북자 김순식 씨의 가족 소재를 파악하고, 9월 제60차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김순식 씨의 동생을 52년 만에 전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2월부터 고령의 귀환납북자(6명)를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신규로 구축하여 개인별 '위기도 조사지' 카드를 제작하고 월별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월에는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통일부장관이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가족과 함께 40여 년 전 고등학생 납북 사건의 현장인 선유도(전북 군산시)를 방문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도 참여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설치하였다. 이어 6월에는 통일부차관이 고교생 4명이 납북되었던 홍도(전남 신안군) 현장을 방문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제막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포럼을 통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직접 소통하였다.



선유도 고교생납북자 송환기원비



선유도 송환기원비 제막식(5.24.)

2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납북자대책 전문가 정책간담회(2.27.), 4월 '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4.26.), 6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반도 국제 포럼」(KGF, 6.25.),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10.28.~29.)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시민단체(북한인권시민연합)와 정부(통일부·문체부) 및 주한 외교단(캐나다)이 공동으로 연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11.26.)하여 납북피해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일반 관람객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송이물망초'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11.26.)

(2)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 차원에서는 양자·다자 간 협의를 강화하고 납북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주요 국가와 연대 및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노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2024년에도 정상회의 등을 통해 후속 공동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한-루마니아 정상회담(4.23.),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 한-뉴질랜드 정상회담(9.4.), 한-슬로바키

아 정상회담(9.30.), 한-필리핀 정상회담(10.7.),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제27차 아세안+3 정상회의(10.10.), 제1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10.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11.15.),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11.25.) 등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노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주요 계기 시 억류자 문제 해결에 관한 입장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주요 국가와 협력 및 연대를 확산하였다.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 억류 4천일을 계기로 통일부장관, 미국 국무부, 캐나다 외교부가 동시에 '한국인 억류자 송환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부처 장관으로는 억류자 석방과 관련하여 처음 발표하는 성명이었으며, 미국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도 한국의 억류자와 관련하여 최초로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가 동시에 발표한 것도 처음이었다. 성명 발표 이후에 세계기독연대(CSW)·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국내외 시민단체도 한국의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 발표를 진행하였다. 12월 3일에는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을 계기로 통일부 대변인, 국제종교·신념자유연대(IRFBA) 의장, 영국 의회 내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주한 캐나다 대사,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 등이 '한국인 억류자 송환 촉구' 성명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세계기독연대(CSW)는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기원하는 공동기도문을 세계 각국의 교회에 발송하였으며, 영미권의 1천여 개 교회에서 억류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기원하는 공동기도문 낭독과 예배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가 납북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납북피해자의 국제무대 증언을 적극 지원하였다. 2024년 3월에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가 진행 중인 스위스 제네바에 억류 선교사 가족이 방문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8.30.)을 계기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를 개최(8.29.)하여 17개국 주한 외교관이 납북자·억류자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둔 11월에는 억류자 가족이 유럽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 및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관계자 등과 면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10년간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지속해 온 게르다 에를리히 여사 등과 만나고, 해당 시위에 동참하는 등 납북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억류자 가족 국제행사 참석·증언(3.19.)



납북피해자 가족 호소 공청회(8.29.)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11.7.)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보편적정례인권검토 중 처음으로 서면질의 및 구두권고에 북한 억류 선교사 3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미국 역시 처음으로 서면질의에서 북한 억류 선교사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구두권고에서도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서도 우리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에 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구두권고에도 동참하였다. 아울러, 2024년 12월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함으로써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통일부장관 등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공식 사죄 및 납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북한에 꾸준히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상·고위·실무 등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였다.

(3)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정부는 전시납북자 명예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내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전시납북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던 납북자들을 기억하며 납북 사건의 실상 및 인권의 가치를 후손에게 일깨워 주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종 전문 박물관인 기념관은 전시납북자 관련 유물 5천 5백여 점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 유물은 주로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납북자 개개인의 사진·저작물·생활용품 및 구입·복제 등을 통해 수집한 전시납북 관련 문서·신문·서적·사진·영상이다.

2024년에는 유물 270점을 새로 구입하는 한편, 'FORGET ME NOT(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기념관 소장유물 중 2백여 점을 골라 30개의 흥미로운 주제로 풀어쓴 연구자료집 『유물, 여전히 선명한 흔적』을 발간하는 등 납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6.25전쟁 및 납북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잠시 멈춤, 함께 시작', '옥희가 겪은 6.25전쟁 이야기', '카드로 만드는 납북자가족 이야기'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외국인의 기념관 방문 확대를 통해, 납북 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약 39% 증가한 5만 96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24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별전시 'FORGET ME NOT' 포스터



유물 구입 『조선식물도설』


교육 프로그램 '잠시 멈춤, 함께 시작'



연구자료집 『유물, 여전히 선명한 흔적』

한편, 2024년 8월에는 기념관 발간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이 우리나라 대표 디자인 공모전인 'K-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정부 간행물로서는 최초로 '위너'를 수상하였다. 이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대중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은 현재까지 발굴된 전시납북자 관련 명부 14종 가운데 주요 명부로 분류되는 12종의 내용을 한 권으로 종합하여 발간한 연구자료집이다.

정부는 전시납북자의 명예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으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

며 매년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협의회에서 개최한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6.28.)에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전시납북자 가족을 초청하여 기념관 개관 7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막식 행사를 개최(11.29.)하는 등 납북자들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6.28.)



납북자기념관 개관
7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막식(11.29.)

제4절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

① 수해 지원 제의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노력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당국 차원에서 식량·비료 등을 지원하였고 수해, 감염병, 용천 재해 등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을 해왔으며, 2022년 5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의한 바 있다.

2024년 7월 말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신의주·의주 등 인근 지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8월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에게 위로를 표하고 긴급지원을 제의하였다. 대북 제의는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장관과 차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의 수해 지원 제의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피해를 본 북한 주민을 고려하여 북한이 하루빨리 호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수해 지원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표명하였다.

한편,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 목적의 민간단체 북한주민접촉신고 10건(8.30.~10.5.)을 수리하였다.



대북 수해 지원 제의(8.1.)



차관, 대북 수해 지원 호응 촉구(8.6.)

②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협업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6년 이후 2024년까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총 2억 6,677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각각 5개년 업무협약(MOU)을 연장 체결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의 국경 개방 동향을 지켜보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 등과 북한 복귀 및 사업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보건 상태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북한 내 국제기구 복귀 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가 평양에 상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어린이 필수 백신을 지원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북한 영유아 백신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방안을 점검하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로 북한 내 악화된 결핵 관련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과 함께 북한 결핵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 결핵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한 대사관 및 국제비정부기구와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여건 조성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기구가 북한에 복귀하면 어린이 백신, 영양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③ 대북 인도적 지원 기반 조성 노력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 외부 지원 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대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여건 조성 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진단

정부는 장기간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취약계층의 건강·영양상태, 민생경제 상황, 결핵 등 보건의료 실태, 기후환경 정책 및 전망 등 분야별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는 국제기구가 공개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아동 영양·발달, 모성보건 등 북한 아동과 여성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물과 위생환경 실태도 진

단하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통제강화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북한 결핵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문가는 향후 결핵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북한의 기후환경 정책 및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6.5.)



북한 결핵 관련 국제세미나(11.5.)

(2)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정부는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를 대표하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개별 민간단체와 면담을 통해 북한 주민 접촉, 물자 반출, 유엔 대북제재 면제, 기타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특히, 북한 수해 지원 관련 북한 주민 접촉을 추진한 민간단체와 면담을 통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상황 변화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긴급구호·보건의료·농업·산림·기후환경 등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분야별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3) 제도적 기반 정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인도적 협력 관련 사업 절차,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과 관련 통계,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대북 인도적 협력 관련 보고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내 인도적 지원 관련 접촉, 반출, 유엔 제재 면제 등 과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입력·재정비하여, 향후 대북 지원 시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제2절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정착지원 정책 강화

제3절 |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제4절 |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정착지원 거버넌스 강화











제3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024년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였다. 정부 기념일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최초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탈북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등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보호를 넘어 가족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착기본금을 2025년 예산안에 2024년 대비 50% 인상하여 반영시켰다.

그 결과,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79.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남한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관심과 적성에 맞는 구직 준비 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취업 포털과 연계하여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구축하는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공공부문 취업 확대를 위해서도 2025년부터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4년 64.1%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고용률은 2023년(60.5%)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60.1%로 전체 국민 고용률(63.5%)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다만, 탈북여성의 실업률이 7.7%로 2023년(5.1%)보다 2.6% 증가하여 탈북여성의 일·육아 병행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도 지속되었다. 특히, 위기 사례 발굴, 예방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경찰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가 협력하여 확인된 각종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위기 징후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고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

보호 신청 및 국내 이송

- 보호 신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 보고 및 전파
- 해외 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 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 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국내 입국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 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 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보호 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에서 정착 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우리 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양성평등·법정 교육, 정서 안정 및 건강검진 등
- 초기 정착지원: 가족관계 창설, 주거 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일자리 지원: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훈련, 취업 알선, 자격 인정 등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거주지·취업·신변 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 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87명
  - 종합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2024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36명으로 2023년의 196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누적 인원은 총 3만 4,314명이며, 그중 여성 입국자는 2만 4,746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2.1% 수준이다. 연령별 현황은 입국 당시 30대가 28.8%(9,855명)로 가장 높으며 20~30대가 전체의 57.1%(1만 9,526명)를 차지한다.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4.6%(1만 5,264명), 노동자가 39.7%(1만 3,586명)로 2개 직업군이 전체의 84.3%(2만 8,850명)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학력은 중·고등학교가 69.2%(2만 3,699명)로 가장 높고, 전문대 10.5%(3,588명), 대학 이상은 7.0%(2,383명)이다.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 58.4%(1만 9,976명), 양강도 17.9%(6,138명), 함경남도 8.5%(2,916명)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 비율이 높다.

2015~2024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남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32	26
여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210
합계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여성비율	80.3	78.7	83.3	85.2	80.7	68.6	36.5	47.8	83.7	89.0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①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운영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급감하였던 교육 인원은 2023년 이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2024년에 242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2024년 하나원 수료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3	7	4	13	6	1	3	17	15	16	21	34	7	144
'24	20	11	13	23	17	8	6	29	18	28	41	28	242

정부는 하나원 교육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하나원 교육생과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4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강의식 이론 위주의 수업 대신 현장 체험교육 강화를 2024년 사회적응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교육생들의 수업 효능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편된 기본계획에 따라 5개 영역, 12주 400시간의 기초교육생 사회적응교육을 편성·운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의 5개 영역은 ①우리 사회 이해증진 교육 ②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 ③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교육 ④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교육 ⑤초기 정착지원 안내 교육이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원은 연령에 따라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성인반, 경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성인반은 남녀를 분리하여 여성 성인반은 안성 본원에서, 남성 성인반은 화천 분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성인반과 남성 성인반은 기본 교육의 5개 영역은 동일하나, 직업훈련 과목, 양성평등 관점 통합교육의 세부 과목 등에서는 교육 내용에 남녀 간 차이를 반영하였다.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 하나원 안성 본원

우리 사회 이해증진(153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162시간)
• 시장경제 적응, 사회 이해 교육 • 정보화, 언어 교육 • 대한민국의 정체성	• 직업 선호도 검사, 진로지도 • 직종 설명, 기초 직업훈련 • 취업 설계

12주 400시간

초기 정착지원(34시간)	양성평등·통합교육(21시간)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30시간)
• 정착지원제도 이해 • 신변보호담당관 안내 • 설문 및 교육평가	•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 • 민주시민 권리·의무	• 마음나눔, 마음돌봄 • 마약중독 예방, 결핵 교육 • 건강 관리법, 체육 활동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운영	언어, 운전, 컴퓨터, 공예 교실, 부모 교육 등	

(2) 실제 사례, 현장 체험, 법률 교육 등 강화

정부는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사례 중심의 강의 및 현장 체험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선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사례특강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을 연극으로 제작·공연하는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도시문화체험·봉사활동·가정문화체험 등 기존 현장체험 과목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그리고, 마약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법률 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장기간 탈북으로 지친 교육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 활동을 강화하였다. 배드민턴, 요가, 탁구 등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생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하위 평가 과목의 강사 및 강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진로지도 및 심화 직업훈련 과정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취업 능력을 높여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2020년에 하나원 내에 직업교육관을 개관하여 기초교육생과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고용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 취득과 기술 습득을 목표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기초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직업교육, 진로상담, 직종 설명, 기초직업훈련(자격증반, 직종체험반), 취업 설계(생애 설계) 과정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합리적인 진로의사 결정과 직장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성에 있는 민간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이해 및 경험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직장 이해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심화 직업훈련은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취업 능력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 수요를

심화직업훈련 교육 과정



정보화 엑셀 과정



바리스타 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청소년·청년층 진로캠프



피부미용실기 과정



도배기능사 과정

반영하여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과 현장실무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에는 13개 과정에 총 284명이 참여하여 273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중 90%(실무과정 제외)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3개 기수 192명 중 177명이 신청하여 92%가 참여하였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현황

(단위: 명)

기수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계
인원	16	5	8	18	11	3	3	22	15	14	9	31	22	**177**

(4) 하나둘학교 운영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는 교육생을 유치반(만 4~6세), 초등반(만 7~12세), 청소년반(만 13~18세)으로 편성하여 연령, 재북 학력,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학 가능).

청소년반은 교육부 파견교사가 담당하고, 예체능 등 일부 과목은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하였다. 유치·초등반은 현재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위탁교육 중이며, 남한 학생과 함께 통합수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탈북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말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특별반을 편성하여 기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하였다.

청소년반 정규프로그램은 12주 총 406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학력 증진 및 학력 결손 보충 232시간(56%) △우리 사회 이해 78시간(19%)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76시간(19%)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 20시간(6%)으로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제3국 출생 자녀 포함)

(단위: 명)

구분	'99~'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청소년	169	232	276	220	192	198	114	106	90	68
초등	97	104	107	142	118	179	124	97	87	49
유치	19	53	54	63	70	69	42	38	28	28
합계	**285**	**389**	**437**	**425**	**380**	**446**	**280**	**241**	**205**	**145**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청소년	86	116	108	105	52	3	7	13	22	2,177
초등	46	43	49	57	19	1	-	1	8	1,328
유치	25	36	20	23	7	-	1	5	1	582
합계	**157**	**195**	**177**	**185**	**78**	**4**	**8**	**19**	**31**	**4,087**

구성되었다. 교육과정 중 현장 체험학습은 △역사·문화(박물관) △통일·안보(전쟁기념관) △금융교육(은행) 등을 실시하였다.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의 진학과 진로 결정을 위해 진로 체험, 학교 탐방, 대안학교 설명회(10개교 참여), 담임교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별 적성을 찾도록 진학·진로를 지도하였다. 또한, 하나둘학교 졸업 전에 '경기도교육청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 인정을 신청하여 탈북청소년의 진학을 지원하였다.

하나둘학교를 졸업한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지도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수료 후 다양한 지도를 진행하였다. 하나둘학교에 파견되었다 복귀한 교사 중 10명을 '하나교사'로 위촉하여 졸업생 19명과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학습, 진로, 생활 상담 등 총 38건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나둘학교 졸업생 16명과 전직 교사 12명을 하나원으로 초청하여 하나원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사제 간 정을 나누며 진로·진학 상담도 하는 사제동행 캠프(7.30.~8.1.)를 진행하였다.




2024 사제동행 캠프(7.30.~8.1.)




2024 졸업생 수학여행(10.25.~27.)

한편, 탈북학생 교육지원 및 하나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였다. 하나원 교육생 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감축된 교육부 파견교사를 증원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였다. 그 결과 총 3명(국어 1명, 수학 1명, 사회·역사 1명)의 교사를 충원하여 2024년 청소년반 교육 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② 건강 증진 및 정서 안정

(1) 하나의원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원 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2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성 본원은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치과·한방과 6개의 진료과목을, 화천 분소는 내과·치과·한방과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입소 교육생 대상 개인별 진료 및 복약지도, 감염관리, 예방접종, 보철치료, 보건교육 등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건강센터를 증축하여 산부인과 진료 및 암 검진 등을 통해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치료도 병행하였다. 중증환자 관리는 2차, 3차 협력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및 입원·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진 및 혈액검사, 일일 복약지도를 수행하고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기수별 결핵 예방 교육 및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을 예방·치료하도록 지원하였다.

시호나눔재단은 2014년부터 하나원 교육생 시력검사 및 안경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업무협약 재체결을 통해 하나원 내 시력검사실을 신설, 2024년도 총 11회 166명에게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102명에 대하여 안경을 지원하는 한편,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였다.

하나원 수료 시 개인별 의무기록을 배부하고 사회 정착 초기 수료생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전국 25개 하나센터, 67개의 협력병원 및 단체와 의료지원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27곳의 의료 취약시설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및 환자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서울 지역 탈북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5.31.)



충남 지역 탈북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10.25.)

(2) 마음건강센터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하나원 내 마음건강센터를 두고, 정신과 진료 및 개인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생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해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검사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하나원 생활 중 겪는 심적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전국 25개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수료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시작하였다. 수료생 중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인 유선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애로를 줄여주고, 지역 상담사와 연계해 주었다.

하나원 입소 교육생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외에도 2024년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프로그램이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과 '자살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의사소통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은 한동대 교수진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27명이 수료하여 현재까지 총 5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강사가 배출되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예방교육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강사 양성교육(11.1.) 및 보수교육(9.26.)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89명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직원 등이 동 교육을 수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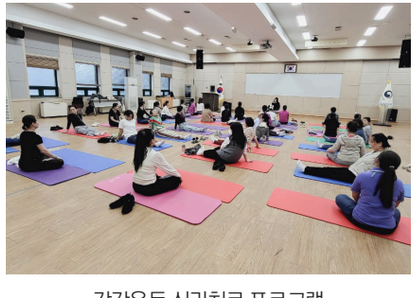
교육생에게 양질의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3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생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음건강센터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의사소통 강사 양성 과정



움직임 테라피 프로그램



감각운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 프로그램

③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 남성 성인반 프로그램

정부는 하나원 화천 분소에서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사회적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시간 등 기본적인 틀은 안성 본원과 동일하나, 폭력예방 프로그램과 자동차 운전 및 전기·도배·타일·조적(벽돌·블록)·미장·중장비 실습교육 등 성인 남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현장 체험학습을 재개하여 하나원 교육기간에 우리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 위주로 주 1회를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대중교통·금융기관·공동주택 체험 등 수료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함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충원·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였고, 지역축제 참가, 영화·계절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위해 2020년 원내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이후 1차 기능시험 합격률이 도입 전 64%에서 2021년 97%, 2022년 90%, 2023년 94%, 2024년 94%로 대폭 상승하였다. 2022년부터는 도로주행 시험까지 지원하여 2022년 79%, 2023년 86%, 2024년 89%의 교육생이 하나원을 수료하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전기·도배·타일·미장·조적 등 직종체험장을 화천 분소에 새롭게 조성하여 원내 실습교육을 하였으며, 굴착기·지게차 등 중장비는 외부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과정을 이수하였다.

(2)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하나마음쉼터 콘셉트



하나마음쉼터 개소식(5.31.)

정부는 202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힐링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 안정을 강화하는 정착지원 서비스로서 참여자에 따라 맞춤형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하나원 화천 분소는 초기의 힐링이나 정서 안정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 회복 및 심리 치유 등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시킨 '하나마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2024년 5월 31일 통일부차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정착지원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원 화천 분소에 '하나마음쉼터'를 개소함으로써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총 29회를 진행하였고, 64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다.

2024년에는 직장인·청소년·가족 등 참여 대상 확대, 고위험군 대상 3박 4일 프로그램 개발, 원거리 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고,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한국심리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화천 분소를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허브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건강상담 프로그램(4.3.~5.)



토닥토닥 내인생아 집단상담 프로그램(5.8.~10.)

(3)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교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신변·취업·거주지 보호담당관, 탈북학생 지도교사,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담당관,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하나센터 간부진 등을 대상으로 5개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육과정을 7회 운영하였고 189명이 참여하였다.

2024년 제2하나원 직무교육 운영 현황

과정명	기간		교육 형태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1기	1.24.~26.	집합교육(2박 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1기	3.20.~22.	집합교육(2박 3일)
	2기	9.2.~4.	
	3기	9.11.	집합교육(1일)
하나센터 간부진	1기	7.16.~17.	집합교육(1박 2일)
탈북학생 지도교사	1기	8.6.~8.	집합교육(2박 3일)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담당관	1기	11.17.	집합교육(1일)

④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1)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 사업

정부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외부 인사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3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외부 방문 프로그램을 점차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24년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합하여 총 67개 기관에서 1,167명이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해외에서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일행, 올로프 스코그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 일행, 안찰리 당카 태국 안보국장 등 17개 기관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방부, 지자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50개 기관·단체가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미국 북한인권특사 방문(2.16.)



EU 인권특별대표 방문(10.15.)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남한 주민과 소통·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제3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 지역 정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사 개최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청행사인 '소풍'을 진행하였다. 고령·장애·트라우마 등의 사유로 집 밖 이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110여 명을 30개 북한이탈주민 봉사단체와 함께 안성 하나원으로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료한 교육생들의 정착 노력을 격려하고 친정집 같은 하나원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11.23.)에는 하나원 수료 북한이탈주민과 직계가족 294명을 초청하여 친교마당, 체험마당, 어울림마당, 어린이마당, 공연마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소풍' 초청자 입장(7.8.)



'친정집 나들이' 행사장 전경(11.23.)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정착지원 정책 강화

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개최

2024년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최초 지정한 의미 있는 해였다.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과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7월 14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하였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5월 21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아울러, 7월 14일에는 첫 기념일을 의미 있게 기념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하며,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삼기 위해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단위로 진행되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7월 14일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200여 명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꿈을 꾼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다짐을 발표하는 '통일을 그리다' 등 감동적인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맞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자유를 향한 용기' 기념비 제막식(8.1.)을 개최하였다. 기념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 2024년 7월 14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7.14.)


기념비 제막식(8.1.)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통일부와 서울시,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한 시민참여 어울림 행사는 북한·탈북 과정을 테마로 한 패션쇼, 탈북예술가 공연 등 각종 공연과 북한·탈북 사진전, 북한 음식 체험 등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북 주민 4천여 명이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으며, 우리 사회 포용과 정착이라는 기념일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4일을 전후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하나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협력하여 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시민참여 행사, 남북한 주민 소통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7.14.)

②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계기 정착지원 정책 강화

(1) 제4차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2024~2026) 수립

정부는 2014년 이후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4년에는 통합과 포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책임 강조, 제3국 출생 자녀 등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강화, 우리 사회 건설적 기여자로서 역할 제고 등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중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를 6대 분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주요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 반영하여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6대 분야 25개 정책과제

6대 분야	25개 정책과제
1. 북한이탈주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1-①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개선 및 성공 사례 확산
	1-② 멘토링을 통한 성공 정착 견인
	1-③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1-④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2.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	2-① 북한이탈주민 보호 원칙 강화
	2-②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체계 강화
	2-③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 지원 강화
	2-④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
3. 미래세대 (제3국 출생)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지원	3-① 제3국 출생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3-② 모성 보호 및 건강 가정 형성 지원
	3-③ 정규학교 적응 지원
	3-④ 특성화·대안학교 교육 지원·환경 개선
	3-⑤ 미래세대 잠재 역량 강화
	3-⑥ 무연고청소년 보호 강화
4.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4-① 전문직 진출 확대
	4-②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4-③ 채용 유인 체계 마련
	4-④ 장기근속 유도 환경 조성
5.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5-①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
	5-② 북한이탈주민 새출발 지원
	5-③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6.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6-①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체계 강화
	6-② 지자체 정착지원 책무 및 역할 강화
	6-③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6-④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2)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긴요한 정착, 역량, 화합 등 3개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착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초기 단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 확대, 탈북여성의 일·육아 병행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역량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역량을 키워 자립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채용 확대, 세액공제 등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 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합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우리 사회 화합을 위해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이 나중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등 자립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에 북한이탈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종래 북한이탈주민 개인에 초점을 두어왔던 정부 정책을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10대 과제)

1	정착	① 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③ 탈북여성 일·육아 병행 지원 ⑤ 중앙-지방정부 협력, 촘촘한 안전망 구축	②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④ 제3국/국내 출생 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2	역량	⑥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⑧ 탈북민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⑦ 탈북민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3	화합	⑨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⑩ 지역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

10대 과제에 포함된 주요과제는 2025년 정부 예산과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

(3) 정착금 개선 등 초기 지원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비롯한 각종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금은 정착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되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 지원제도이다.

정착금 중 정착기본금은 사회진출 초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진출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에 정착기본금을 1인 세대 기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세대원 수별 정착기본금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22	800	1,400	1,900	2,400	2,900	3,400	3,900
'23	9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24	1,000	1,600	2,100	2,600	3,100	3,600	4,100
'25	1,500	2,400	3,150	3,900	4,650	5,400	6,150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령, 장애, 장기 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령가산금과 한부모가정 아동보호가산금은 하나원에서, 그 밖의 가산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3년 차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립 유도를 위해 새출발장려금을 신설하였다.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취업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200만 원씩 최대 3회의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24년 장려금 지급 기준

(단위: 만 원)

구 분	동일 업체 취업 기간	금액	
		수도권	지방
취업 장려금	6개월	200	250
	1년 차	500	600
	2년 차	600	700
	3년 차	700	800
새출발 장려금	1회 차(6개월)	200	
	2회 차(6개월)	200	
	3회 차(6개월)	20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신고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 무연고청소년 보호 강화

무연고청소년은 보호 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정부는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 시설(13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심리 상담, 교육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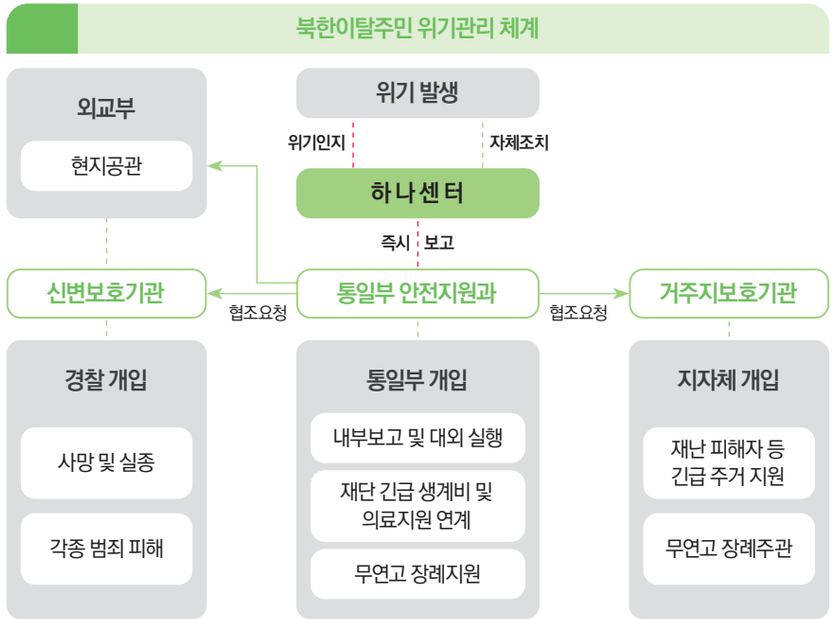
2024년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에 아무 연고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 결정 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망 구축

(1) 북한이탈주민 특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통일부는 2022년 11월부터 단전·단수·통신비 체납 등의 위기 지표(2024년 말 기준, 총 45종)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격월로 연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지표가 다수 중첩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징후 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70세 이상의 1인 가구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상시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고위험 징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조사, 현장 방문 및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법무부) 등을 통해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나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해당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인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4년부터 정식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 경찰청,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각종 정보도 종합·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통일부는 하나센터,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제공,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 및 통합안전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

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2024년 하나센터는 총 6만 6,34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사망위로금, 무연고자 장례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긴급생계비 658건, 의료비 927건, 장제비 33건, 사망위로금 58건, 무연고자 장례 22건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계 곤란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국의 하나센터 및 신변보호기관과 협의하여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2024년에는 37명의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에게 총 1,8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고령 독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시범사업('똑똑! 안녕하세요?', 서울·경기·인천 지역 530여 명 대상 유제품 배송)을 추진하였다. 2025년부터는 유제품 배달 안부 확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천여 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하나센터에서는 만 70세 이상 고령 독거 가구에 대해 월 1회 대면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3)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및 피폭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제3국 체류 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리 안정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에 위치한 마음숲상담센터, 인천에 설치된 마음소리상담센터에 이어 2024년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에 하나마음쉼터를 개소하였다. 아울러, 권역별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4년 영남 지역 부산 온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3.)하였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24년에는 추가로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에서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3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도 증액하여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 모두 조속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일자리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통일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연고청소년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을 신설하였다.

(1) 제3국·국내 출생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와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10월 의원입법으로 교육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시키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4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만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부터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였다.

(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의 학습 결손 해소 및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탈북청소년에게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는 특성화학교(1개교)를 포함하여, 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4개교)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6개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학생들과 함께 진로특강 및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 졸업식·여명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 등을 계기로 탈북청소년과 소통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제3국 출생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3국 출생 아동의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을 확충하였으며, 한꿈학교와 여명학교 등의 안정적인 교사(校舍) 확보 등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통일부장관, 하늘꿈중고등학교 격려 방문(2.7.)



통일부차관, 한꿈학교 진로특강(10.16.)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소재지
특성화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 안성
대안학교 (인가)	여명학교	서울 강서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 성남
	드림학교	충남 천안
	장대현중고등학교	부산 강서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남북사랑학교	서울 구로
	다음학교	서울 서초
	반석학교	서울 서초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

(3)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및 학습 지원

정부는 탈북아동·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제고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3월 기준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전국 22개 초등 및 중등학교에 20명의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하였다. 통일전담교육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과 기초 학습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탈북아동·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탈북 과정에서 수반되는 학력 결손, 문화 및 언어 차이 등으로 발생한 학력 불균형을 극복하고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해 화상영어 및 방문학습지를 지원하고 있다. 화상영어교육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주 2~3회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160여 명을 지원하였다. 방문학습지는 만 3세 이상 초등학생인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1~2개 과목, 주 1회 방문교사가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천여 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규 수업 이후 학업 보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7개소)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다.

(4) 대학 진로·진학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국공립 교육기관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사립 교육기관은 반액을 보조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개 학교, 1,540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탈북대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탈북대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기관(대학과 민간단체 4개소)을 지정하고 어학,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과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내 외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탈북청소년·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제도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탐색과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전문대학)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하나센터 등에도 제공하였다.

②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정부는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 및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행복통장을 운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개인별 맞춤형 구직 지원체계 강화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는 구직과정을 맞춤형·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 준비 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73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다. 1단계인 상담 및 진단 단계에서는 적성검사, 개인별 일자리 준비 정도 진단, 심층상담 등을 진행하며, 2단계인 일자리 준비 단계에서는 발음 진단, 직장 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스피치 교육,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단계인 일자리 탐색 단계에서는 일자리 체험 및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가고, 마지막 4단계인 취업 성공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취업·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성공 패키지」 단계별 과정

1단계 상담 및 진단	2단계 일자리 준비	3단계 일자리 탐색	4단계 취업 성공
① 종합상담, 취업상담사 심층상담 ② 일자리정보 제공	③ 언어·스피치 교육 ④ 일자리 클리닉 ⑤ 멘토링 지원	⑥ 채용설명회, 코칭 ⑦ 일자리체험 지원	• 취업, 창업, 영농 등 각 사업과 연계

또한,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여 중장년층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4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고용복지센터 13곳에 취업상담사가 주 1회 상주하면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1개 기업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각 9개와 5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인크루트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채용관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우대 채용, 공공기관 채용, 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스피치 교육



남북하나재단-인크루트 온라인 채용관

(2)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개발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 직업역량 강

화를 위해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선호도 및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회계실무자 양성, 버스기사 양성, 골프캐디 양성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총 3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수료하였다.

재북·재남 경력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1인당 최대 7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내 대학(연세대, 원광대 등)과 협업하여 의사·치과의사 등 국가시험 대비 실기실습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탐색 및 직장경험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수생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연수비를 지원하는 단기연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에는 206개 기업에서 총 195명이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중에서 191명이 연수기업에 채용되었다.

(3) 창업 지원 확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는 연 200만 원, 3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경영개선자금을 2023년부터 연 300만 원, 3년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총 318명의 북한이탈주민 창업인을 지원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다변화하여 일반 창업 컨설팅 외에 마케팅, 특허, 공공조달, 회계 등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아산나눔재단과 협업을 통해 탈북

청년 중심 스타트업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를 운영하였고,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의 창업을 재정적으로 지원(최대 1,000만 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 및 영농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일터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시송편 제조 현장 방문(11.6.)



돌산 갓 재배 현장 방문(11.6.)

(4) 귀농 및 영농 지원

정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및 현장실습, 영농 창업비 지원, 판로 확보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1명을 지원하였다.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초이론교육 및 실습 합숙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수료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별 선도 농가와 연계하여 최대 4개월간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영농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영농창업비 지원과 영농생산품 판로 확보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귀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영농인을 대상으로 영농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부여군·익산시·홍천군과 협력을 통해 농기계 실습, 농촌생활기술 실습, 기초작목 재배 등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귀어 희망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7명이 참여하였다.

(5) 미래행복통장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그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3개월 이상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소득의 30% 이내) 한도로 최대 4년까지 저축하면, 정부는 이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 형성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확대 및 각종 제한 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2년부터 기존 근로소득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등)도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 및 학업 수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거주지 보호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일시 중지 횟수(총 3회 → 6회) 및 기간(1년 → 1년 6개월)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자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5년의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하여 육아와 질병,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에는 거주지 보호 기간에 상관없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다.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가입 인원	10	182	380	458	510	559	406	351	162	112	**3,130**
만기 지급 인원	–	–	–	17	49	169	398	433	453	488	**2,007**

(6) 탈북여성 일·가정 양립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72%에 이르는 만큼 탈북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양육과 돌봄 분야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출생지 현황, 재학 상태, 생활 및 돌봄 형태, 양육과 돌봄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여, 여성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에 북한이탈주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방법 등을 추가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가족 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도 추진하였다.

제4절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정착지원 거버넌스 강화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외에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7월 10일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기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남북 주민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남북하나재단 소식지인 『동포사랑』을 기존 격월에서 매월 발간으로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확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착한(着韓) 봉사단'을 지원하고, 9월 28일에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봉사자를 소개하고, 지역별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발·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28일에는 농촌 일손 돕기와 남북 주민 통합을 주제로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다. 남북한 주민 농가(쪽파 농장 1곳, 사과 농장 6곳)를 선정하여 16개의 '착한 봉사단' 및 남북하나재단 임직원 100여 명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포장하여 16개 봉사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보내 남북한 취약계층에게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2024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개최(7.10.)


연합 봉사활동(10.28.)

②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1) 북한이탈주민과 소통 및 교류 활성화

2020년 5월 개관 이래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직접 또는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인 '남북 생애나눔대화' 및 심화프로그램 '1박 2일 생애나눔대화'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하루공방', '너나들이 노래교실', '손쉬운 아코디언' 등 다양한 취미교실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는 남북통합문화축제(5월), 찾아가는 문화행사(6월, 11월), 작은 음악회(9월)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남북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월 개관 4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된 '2024 남북통합문화축제'(5.17.~18.)에서는 통합문화포럼, 남북 혼성밴드 버스

킹, 토크콘서트, 남북 예술인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6월에는 속초에서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6.16.), 11월에는 부산에서 '2024 가을음악회'(11.8.)를 개최함으로써 대상과 지역을 넘어 남북통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9월에는 남북 예술가 합동공연으로 '작은 음악회'(9.28.)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 문화 교류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합문화포럼(5.17.)


남북 주민 아코디언 공연(5.18.)


남북 예술인 공연(5.18.)

센터에서는 기획전시관과 통합문화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센터를 찾는 시민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전시관에서는 '남북 분단의 아픔', '고통 치유의 노력',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등을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문화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이산가족의 고향을 체험하고 북한 음식 만들어보기, 평양인민대학습당 앞 광장에서 활쏘기, 서울 경복궁 앞에서 투호놀이 등 남북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방문 인원은


통일문화체험 자동차여행 VR(상시)


기획전시관(상시)

2024년 7만 4천여 명으로 2023년 방문 인원 6만 7천여 명보다 7천여 명 증가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

센터는 남북 통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벽을 넘은 인(人)터뷰', 남과 북의 갈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남북문화 갈등 해결 강좌'(4.27., 11.9.)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남북 간 문화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통일인문학 강좌(6.29., 10.12.)와 남북 동일 직업 인물을 초대하여 서로를 비교해 보고 이해하는 '남북 더보기' 강좌를 5회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을 담은 창작 연극 '열 번째 봄'을 제작, 센터 내외 공연장에서 6회(3~12월) 공연하여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6월 22일 공연된 연극 '열 번째 봄'의 경우 문체부장관이 센터를 방문하여 연극을 관람하고 탈북예술인과 간담회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센터 인지도를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센터 자원봉사활동 다큐멘터리, 통합문화 포럼·행사·강좌 등 프로그램별 활동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친근한 이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8.24., 9.8.), 북한이탈주민 소통어학당 토크콘서트(10.26.)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탈북예술인을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역량을 증진하고자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4년에는 도서 분야 6명, 시각예술 분야 3명, 공연예술 분야 9개 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탈북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통합문화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센터에서 '통일음악회'(7.13.), 가족 뮤지컬 '영리한 너구리 동동'(7.17.)을 공연하고 서울시민청 갤러리에서 탈북작가 단체 전시 '기억의 지도'(7.30.~8.3.)도 개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취지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문체부장관 탈북예술인 격려(6.22.)



뮤지컬 '영리한 너구리 동동'(7.17.)



'기억의 지도' 전시(7.30.~8.3.)



탈북예술인 창작지원 선정작 발표(8.10.)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9.8.)



소통어학당 토크콘서트(10.26.)

(3)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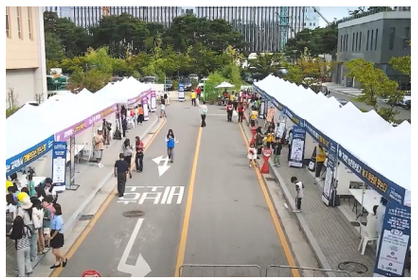
센터에서는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연합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다. 취약계층 겨울 온기 나눔 생필품 키트 제작 등 '정성 나눔 자원봉사'를 3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담그기 등 '음식 나눔 자원봉사'를 4회 진행하였다.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 봉사단'을 창단·운영하여 '민통선 통일촌 평원벼 모내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8회 진행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의 남북주민 자원봉사 단체가 한데 모이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을 개최하여 남북 주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성 나눔 봉사활동(5.11.)



농촌지원 자원봉사단 활동(5.18.)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음식 나눔 봉사활동(11.9.)

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3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정착지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대면회의로 3차례 개최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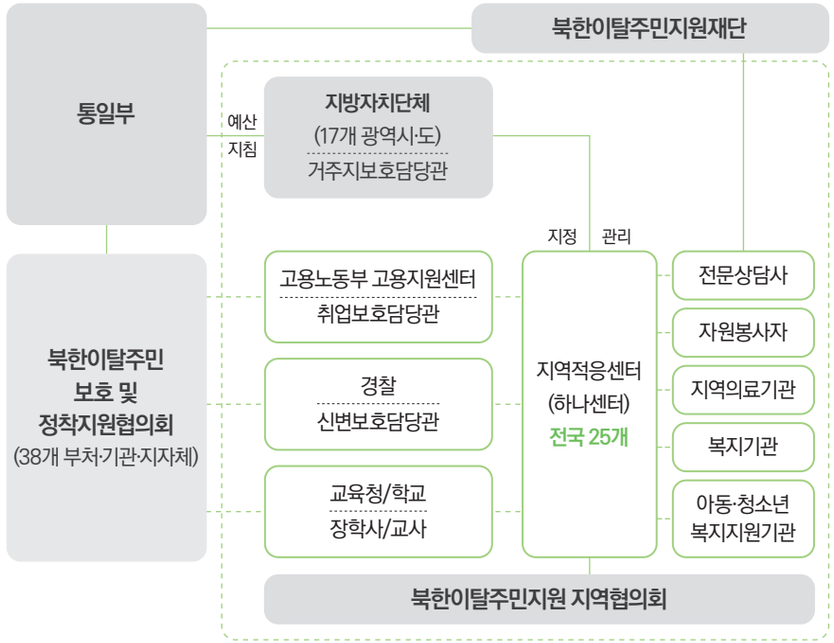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과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하여 정착지원협의회 산하에 중앙-지방협력 소위원회, 교육지원 소위원회, 일자리지원 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정책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착지원협의회 안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정착지원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정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 등 수요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였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주지·신변·취업 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전국 138개: 시·도·광역 18개, 기초 120개)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가 하나센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협의회 내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관련 기관의 인사 등을 위원 범위에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④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정부는 하나센터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2024년에는 하나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여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었으며, 하나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하나센터 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개정(1월)하였다. 제5기 하나센터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각 센터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 공유회를 개최(6월, 남북하나재단 주관)하여 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환류함으로써 하나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2025년 제6기 하나센터 운영 개시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하나센터 운영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운영평가 기준 및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나센터 현장 점검(총 6회)을 통해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실성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센터 종사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개최(총 2회)하였고, 하나센터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10~11월)하였다. 또한, 전국 하나센터 관리자 정례회의를 개최(분기 1회)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04

통일기반 조성

제1절 | 국민 공감대 확산
제2절 |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제3절 |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제4절 | 통일법제 기반 구축
제5절 |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제4장
통일기반 조성

정부는 2024년부터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을 총 3회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에서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울에 집중된 통일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순차적으로 권역별 통일+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2024년에는 강원도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를 개관하여 강원 지역 통일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통일·대북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통일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대외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미국을 2차례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강화하였고, 특히 10월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에 참석하여 한미일 3국 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일부차관이 독일 통일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독일과 협력도 지속하였다. 아울러, 주한 공관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국제 인사와 면담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와 소통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통일부의 대표적인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 국제 포럼'을 확대·발전시켜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을 창설하여 국제사회의 통일담론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국민 북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2024년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하였으며, 빅데이터 및 AI에 기반해 북한정보포털을 개선하였다. 또한, 북한 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 운영을 통해 방문자가 북한 원전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 발전시킨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착공 이후 후속 건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통일법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 통일부는 분기별 통일법제추진협의회와 연례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통일법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일법제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금의 수입을 더욱 다양화·안정화하고 사업비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1절 국민 공감대 확산

① 통일문화 확산 노력

정부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 선정된 행사 브랜드명 「통하나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2024년에는 서울, 인천, 강원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지역사회 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일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였다.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도록 하였고,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에 청년층이 참여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활발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청계천에서 통하나봄」



「인천에서 통하나봄」



「춘천에서 통하나봄」

서울권에서 개최된 「청계천에서 통하나봄」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와 통일을 본다'(6.21.~22.)라는 주제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국회·학계·통일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주요 내빈과 주한 외국인 대학생 등의 적극적 참여로 통일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납북자·억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함께 진행하여 납북자와 억류자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통일부장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北스토리 토크쇼'를 진행하여 국민의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청계천에서 통하나봄」(6.21.~22.)

인천에서 개최된 「인천에서 통하나봄」(9.7.)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인천 지역 어린이 합창단, 태권도시범단, 청소년댄스팀, 대학교응원단 등을 중심으로 공연하여 인천 시민의 주도적인 행사




「인천에서 통하나봄」(9.7.)

참여와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인천시장 축사 및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강원권에서 개최된 「춘천에서 통하나봄」(10.25.~26.) 행사는 춘천 수변공원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원권 통일+센터 개관식과 병행으로 진행함으로써 강원권 시민이 북한의 실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단체장의 개회사 및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의 의미 및 통일미래의 희망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통일배지 만들기, 키링 만들기, 통일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춘천에서 통하나봄」(10.25.~26.)

②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정부는 2024년부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반 국민, 청년,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총 12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1,194명이 참여하였다.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대상자별·권역별로 의제를 달리하여 영남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 지역 주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등 국민 939명을 대상으로 총 7회 개최되었다.

특히, 제5차 토론회(10.2.)는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2024 세계한인회장단 대회(10.1.~4.)'에 참석한 세계한인회장 3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실현에 대해 해외에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7.27.)


'재외동포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10.2.)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통일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통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년 157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개최한 1차 토론회(6.18.)에서는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과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하였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6.18.)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9.10.)

다.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2차 토론회(9.10.)에서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주간」에 인천시와 협업하여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 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오피니언 리더(교수, 학자, 언론인 등) 98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총 3회 개최(8.19., 9.13., 11.14.)되었다. 토론회는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대북정책의 우선 과제, 통일교육, 통일국제협력 등 구체적 의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11.14.)

③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울에 집중된 통일 인프라의 지역 확산을 도모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통일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통일⁺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인천시와 협력하여 2018년 인천통일⁺센터(이하 '인천센터')를,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2023년 목포에 호남권 통일⁺센터(이하 '호남센터')를, 강원도와 협력하여 2024년에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이하 '강원센터')를 개관하였다. 2025년에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경기권 통일⁺센터(의정부)를,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충청권 통일⁺센터(홍성)를 개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일⁺센터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하나센터가 통일⁺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9일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통일⁺센터를 홍보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5월 27일 개설하였고, 지역센터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통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구체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통일⁺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0월 25일 진행된 강원센터 개관식에는 통일부장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관식에 앞서 통일부장관과 강원도지사는 업무협약식을 열고 강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원센터는 지상 3층 건물에 전시·체험장, 통일정보자료실, 다목적체험(요리)실, 통일라운지 등 개방형 통일 관련 인프라로 지역사회에서 '작은 통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원권 통일⁺센터 개관식(10.25.)



통일부-강원도 업무협약 체결(10.25.)

개관식 후 통일부장관은 강원센터의 의미를 설명하는 언론 인터뷰(춘천KBS, 『강원도민일보』 등)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북한 분야 석·박사과정 청년 연구자(12명)와 '8.15 통일 독트린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청년 연구자를 격려하였다.

2018년 최초 시범운영으로 출범한 인천센터는 다양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다. 우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사초청 특강(9회)과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북한인권 전시회(7.9.~18.) 등을 개최하였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통일현장 문화체험(5회) 및 통일영화 상영회(9회)를 개최하였다. 남북한 출신 주민 소통·공감 프로그램으로 '남북생애나눔대화'(10회)를 운영하여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삶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2023년에 이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일현장 문화체험(2회)을 진행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인천 지역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통일어울림한마당',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평화나눔한마당' 행사 등에 참여하여 인천 지역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통일부 직영의 인천센터는 12월 말로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 인천시 운영의 정규센터로 전환하기로 인천시와 합의하여 이관 작업을 마쳤다.



인천시민 대상 명사초청 특강(3~10월)



청소년 통일현장 문화체험(7.2.)

호남센터는 개소 2년차로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민참여·소통 프로그램으로 주말특별프로그램인 '원데이클래스'(10회), 초등생 대상 방학맞이 '통일아 놀자'(3회) 등을 운영하였고, 남북한 출신 주민 소통·공감 프로그램으로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18회),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및 정착수기 공모전 등을 진행하였다. 9월 8일 개관 1주년에 지역민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통일전시체험관, 통일정보자료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문화 체험과 통일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였다. 나아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축제나 행사에 '찾아가는 통일 안내소'를 운영(7회)하여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3~12월)



'찾아가는 통일 안내소'(4~10월)

④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정부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모습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균형 있는 통일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찾아가는 北스토리」는 북한이탈주민·전문가 패널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증언





장관 주재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北스토리」 대학교 방문 행사(3월)

2024년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개최 현황

일자	지역	주제	장소	북한이탈주민 패널
1.5.	서울	재정, 금융	한국세무사회관	2030 세대·대학생
1.18.	서울	문화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인
2.3.	부산	의료	온종합병원	의료인
2.16.	서울	사회, 군복무	전쟁기념관	NGO 대표
2.28.	서울	경제, 사회	자유센터 별관	-
3.7.	서울	경제, 사회	웨스턴조선호텔	-
3.11.	서울	문화	일지아트홀	공무원
3.19.	서울	장마당 세대	코엑스 스튜디오159	2030 세대·연구원
3.20.	서울	인권	연세대 새천년관	종교인
3.21.	서울	청년세대	고려대 SK미래관	공무원
3.25.	서울	인권	이화여대 중강당	종교인
4.3.	서울	경제, 문화, 여성	성신여대 성신관	공무원
4.27.	충남 천안	인권	충남학생교육문화원	NGO 대표
9.25.	강원 춘천	장마당 세대	커먼즈필드 춘천	2030 세대·연구원
10.7.	충북 청주	장마당 세대	충북대 학연산기술연구원	2030 세대·연구원
11.1.	경북 대구	장마당 세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2030 세대·연구원
11.7.	전북 전주	장마당 세대	전주 오거리 소극장	2030 세대·연구원
11.12	충남 대전	장마당 세대	충남대 경상관	2030 세대·연구원

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패널 등과 함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현장 소통을 연간 18회 실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국민·외국인 등 2,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토크콘서트는 대학 재학생과 청년단체 등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11회, NGO 및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7회 개최되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행사 참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각각 96.4%, 88.5%로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천안, 춘천, 청주, 대구,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지역사회에 통일인식을 확산하고, 분야별 북한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토크콘서트 개최 과정에서 행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 행사 연계 및 유관기관 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통일·북한 문제를 대내외에 전파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협조 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3.18.~20.)를 계기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장마당 세대 세션을 개최(3.19.)하였다. 그밖에 주요 도시 방문을 계기로 부산시청, 충남도청, 천안시청 등 지자체와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협업의 모멘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2030 세대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며, 통일·북한 문제에 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였다.



민주주의와 장마당 세대 세션(3.19.)


충북대 청년 참여 행사(10.7.)

⑤ 통일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정부는 2015년부터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제10회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2024 통일로가요」를 개최하였다. 「2024 통일로가요」는 '따라 부르기 쉬운 통일 노래'를 콘셉트로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등 통일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공모하였다.

「2024 통일로가요」 참가팀 공모결과 총 102팀이 신청하였으며, 1차 동영상 예심과 2차 실연평가(10.10.)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하였다. 최종 결선 공연(10.29.)을 통해 '이삼사오'의 '편지를 적는다' 등 총 7곡의 수상곡을 선정하고, 수상자 전원에게 통일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2024 통일로가요」 수상곡 목록

구분	곡명	팀명
대상	편지를 적는다	이삼사오
우수상	그때의 우리는	오빠야문열어딸기사왔어
	결국 우린	The lake
장려상	소낙비	D.B.D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열
	바람에게 바래요	밴드 이삭
	팡파레	오모(OmO)

대상팀 '이삼사오'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12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11.9.) 특별 공연과 「2024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11.9.)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팀 뮤직비디오와 결선 영상 및 특집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 통일방송(이하 'UniTV')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수상곡 앨범을 발매하여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음원사이트에 등록하였다.

「2024 통일로가요」 경연 대회




결선 공연(10.29.)




대상팀 독일 공연(11.9.)

⑥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운영

정부는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네이버 블로그 등 5개 대표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여 국민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유튜브 구독자 수는 2023년 대비 1만 8천여 명 증가하였다.

대표 누리집은 메인화면에 주요 정책 소식을 알리는 직관적 이미지를 배치하여 정부의 핵심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구성하고

대표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구분	주소
대표 누리집	https://www.unikorea.go.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ounikorea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inistry_of_unificatio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korea/
엑스	https://x.com/uni_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unikorea/

지속적인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언제든지 통일·대북정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국민 이용률이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 콘텐츠 시리즈 및 숏폼(short-form)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해 주요 정책 포럼 및 학술회의의 온라인 국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페이스북·엑스의 경우, 통일부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국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블로그는 통일부 청년 기자단의 통일 및 남북관계, 북한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2)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통일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하여 통일·대북정책,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였다. 또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주요 정책과 보도자료를 시의성 있게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또한, 정책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포토뉴스, 숏폼 영상 등의 형식을 적극 활용하고 웹툰 작가, 다양한 영역의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방식을 다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포토뉴스





카드뉴스





숏폼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정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리즈 '한눈에 보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60초 리드北', '증언으로 보는 북한 주민의 삶'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렸다. 또한, 이산가족 영상편지에 기반한 '소원이가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웹툰 시리즈를 제작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출연하는 '통하는 중'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한눈에 보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증언으로 보는 북한 주민의 삶





소원이가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통하는 중

(3) 통일방송 UniTV 운영

통일부는 2011년부터 인터넷 방송국인 UniTV를 운영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UniTV는 통일·북한 문제를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카카오TV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2024년 UniTV는 '통일브리핑', '통일담담', '통일현장', '통일로그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통일NOW」를 총 51편 제작하였다. '통일브리핑'은 남북관계, 통일부 소식 등을 전달하였고, '통일현장'은 정부와 민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소개하였다. '통일담담'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시사 토크쇼이며 통일·북한 관련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통일로그인'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통일·북한 관련 인물을 발굴해서 알렸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실상 알리기, 북한이탈주



통일브리핑



통일담담



통일현장



통일로그인

민 정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영호 장관의 北스토리'(3회), '오픈北'(4회), '통퀴즈'(4회), '잇는필름2'(10회), '전지적 정착 시점'(3회), '나는 탈북 사장님입니다'(6회) 등을 제작하였다. 이 외에도, 통일·안보 이슈를 국민 눈높이에서 소개한 '소통의 광장'(12회), 통일정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활동을 예능 형식으로 풀어낸 '통니버스'(12회)를 기획하였다.

아울러, UniTV는 국민과 소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송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송출하였다. 「통일NOW」 등이 매주 KTV국민방송, 아리랑국제방송TV, 국방TV, MGTV, 소상공인TV 등을 통해 방송되었다. 2024년에는 실향민TV, 온닥터TV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청자층을 더욱 다양화하였고, UniTV 영상물을 통일교육 교재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 적극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통일·북한 이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통일NOW」의 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김영호 장관의 北스토리



오픈北



통퀴즈



잇는필름2



전지적 정착 시점



나는 탈북 사장님입니다



소통의 광장



통니버스

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① 주요국 정부·의회 및 주한 공관 협력 강화

(1) 주요국 정부·의회 대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 나타나 있듯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과 공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였다. 통일부장관은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미국을 2차례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2024년 7월 통일부장관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7.21.~26.)하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7.22.)하고, 통일·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증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미국 방문 계기에 영 김, 미셸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해외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에 참석하고, 싱크탱크·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정책에 대



미국 워싱턴DC 지역 동포간담회(7.21.)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7.22.)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기조연설(7.23.)



영 김 의원 접견(7.24.)

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2024년 10월 통일부장관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 참석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다시 방문(10.17.~20.)하였다.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7월 통일부장관 방미 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10.18.)하였다.

3자 회의에는 통일부장관, 주미 한국대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 등이 참석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미일은 3자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활동 지원·확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발간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연락그룹(Contact Group)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3자 회의에 이어 개최된 북한인권 생존자와 함께한 공개 세션에서는 3국 대표단, 옵서버 국가 대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피해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공개 세션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 예술전시회를 개최(10.18.)하였다.



조지워싱턴대 특강(10.17.)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10.18.)



북한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10.18.)



북한이탈주민 예술전시회(10.18.)

이 외에 통일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10.17.)을 하고, 미국 대학생들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주요국 정부 인사 등과 면담도 진행하였다. 토마스 바거 독일 외무차관(3.12.),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대표단(3.25.),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5.3.),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부장관(5.13.),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11.5.), 미국 외교정책위원회(12.9.) 등의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면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통일부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면담(3.25.)



통일부장관, 유엔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면담(11.5.)

통일부차관은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독일 통일 제34주년 기념식에 참석(10.3.)하였다. 올라프 숄츠 총리, 마누엘라 슈베지히 연방상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되르테 딩거 연방대통령실장을 면담(10.2.)하여 국제 정세 변화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해 소통하였다. 연방대통령실장은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 변화에 공감하고, 다방면에서 긴밀한 파트너인 한국과 독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요아힘 가우크 전 연방대통령을 만나(10.2.)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독 출신 첫 대통령인 요아힘 가우크 전 연방대통령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외에도, 통일부차관은 베를린자유대를 방문하여 특강(10.2.)을 진행하고, 미래세대인 독일 대학생들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소통하였다.



통일부차관, 독일 연방대통령실장 면담(10.2.)



통일부차관, 베를린자유대 특강(10.2.)

(2) 주한 공관 소통 강화

정부는 대한민국과 해당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 주한 공관과 한반도 문제 협력을 위한 소통을 더욱 확대하였다. 통일부 장관과 차관은 주한 공관장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4월에는 통일부장관 주재로 6.25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를 초청하여 정책 설명회를 개최(4.5.)하였다. 21개국의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 또는 대사대리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통일 지우기' 행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담긴 통일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조하였다.

9월에는 통일부차관 주재로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을 초청하여 「8.15 통일 독트린」 정책 설명회를 개최(9.23.)하였다. 28개국에서 주한 대사와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차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통일은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직결된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0월에는 통일부차관이 주한 중남미 대사단(GRULAC: Group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주관 간담회(10.11.)에 참석하여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였다. 간담회에는 주한 중남미 대사와 관계자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통일부차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하고, 중남미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6.25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 대사 정책 설명회(4.5.)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대상 정책 설명회(9.23.)



주한 중남미 대사단 간담회 정책 설명(10.11.)



통일부장관, 주한 일본 대사 접견(10.30.)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10.30.)하여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양측은 한일 관계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일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② 국제회의 개최 및 통일공공외교 강화

(1) 「2024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국제 한반도 포럼」의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통일부의 대표적인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 국제 포럼'을 확대·발전시켜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을 창설하였다. 2024년에는 서울에서 국내 세미나 1차례(9.3.), 일본 도쿄(6.25.)와 미국 워싱턴DC(11.20.)에서 해외 세미나 2차례 등 총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통일담론 확산에 기여하였다.

「국제 한반도 포럼」 국내 세미나는 9월 3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다양한 주제로 세션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를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

을 진행하였다.

6월 25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본 지역 세미나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되었다. 일본 세미나에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 북핵, 북한인권 및 한일·한미일 협력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의 공통 현안인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및 국제사회와 공조와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20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 세미나에서는 '3자 협력과 한반도: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 접근과 북한인권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북한 내 정보 접근권 확대 등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제 한반도 포럼」 국내 세미나(9.3.)



「국제 한반도 포럼」 일본 세미나(6.25.)



「국제 한반도 포럼」 미국 세미나(11.20.)

「2024 국제 한반도 포럼」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세미나(9.3. 서울)	
개회식	• 개회사: 김용호(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 • 축사: 현인택(전 통일부장관)
기조연설	• 기조연설: 반기문(전 유엔사무총장)
주요 논의내용	•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 •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국외 세미나 1(6.25. 일본 도쿄)	
개회식	• 개회사: 우병원(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장) • 환영사: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기조연설	• 기조연설 : 통일부장관
주요 논의내용	• 북한핵 억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 새로운 통일담론과 국제협력 • 북한의 사회, 인권 실상과 변화 가능성 • 중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한미일 대응
국외 세미나 2(11.20. 미국 워싱턴DC)	
개회식	• 개회사: 니컬러스 보노태스(미국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부학장) 우병원(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장)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 환영사: 통일부장관(통일협력국장 대독)
주요 논의내용	• 미국 대선과 국제질서 – 한반도에 대한 함의 •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제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및 인권

(2)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2010년 독일 내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기초하여 2011년부터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 가며 매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독일 측에서는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 동독특임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자문위원 외 발제자 및 관련 전문가,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단하고,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과 독일 분단시기 서독의 통일정책,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측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4.30.~5.1.)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일자		회의 내용
4.30.	세션1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황 • 최근 동독 지역의 정치·경제 현황
	세션2	• 한반도 통일 구상 및 전략 • 서독의 대동독 정책
	세션3	• 북한인권 현황과 전환기 정의 구현 • 동독 인권침해: 독일 연방의회 사회주의 독재 희생자 특임관의 과제 및 역할
	세션4	• 동서독 간 소포교환: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 간 접촉의 의미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증진 방안
5.1.	세션5	• 동독재건: 혁신 및 R&D 전략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전략 • 동독 경제발전의 도전과 기회요인
	세션6	• 한국 북한이탈주민 통합 정책 • 분단시기 동독이탈주민 통합 방안
	세션7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계획 및 추진 현황 • 독일 통일 및 유럽 변화를 위한 미래센터 추진 현황

(3) 통일공공외교 강화

정부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4년 최초로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조사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베트남 등 8개국 시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한반도 통일, 북핵, 북한인권, 국가 이미지 등과 관련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외국인 대상 현장 설문조사 이벤트(11.21.)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세미나(12.3.)

대상 통일인식 현장 설문조사 이벤트(11.21.) 및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세미나 개최(12.3.) 등을 통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주요 국가의 시민이 직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시민의 '통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해외 연구자와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해외의 한반도 문제 연구자와 한반도 통일·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7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세션을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영상은 전체 영상, 연사별 영상,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여 통일부 UniTV 등 누리소통망(SNS)에 업로드하였다. 주제별로 연구자를 섭외하여 총 28명의 연구자와 토론회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대주제는 북한인권, 미국 대선, 북핵문제 등 흥미로운 이슈를 선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션3 한국의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제3자적 시선(10.14.)



세션4 북한 주민의 조용한 변화(10.30.)

해외의 한반도 문제 연구자의 현지 세미나, 강연, 언론기고 등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해외여론주도층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024년 지원대상으로는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대사 등 6명의 전문가를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대사 강연(11.7.)



재미 북한이탈주민 비대면 강연(11.9.)

선정하였다. 위촉된 전문가는 각 활동 지역에서 개별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통일·북한 문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내 한반도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해외 학술교류 사업도 지속하였다. 통일·북한학 학위 과정과 펠로십 과정을 국내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 펠로십 공모로 6명의 지원자를 신규 선발하였고, 학위과정은 기존에 선발되었던 7명을 계속 지원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강의, 토크콘서트,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통일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www.globalnk.org)의 운영을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의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성과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쉽게 접근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4년에는 총 45건의 한반도 문제 관련 분석, 연구, 인터뷰 등을 게재하였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8.15 통일 독트린」 등 시의성 있는 주

제는 시리즈물로 게재하여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관해 재외동포가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외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24년 해외 통일문화행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9월 미국 보스턴, 11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총 2회 개최되었다. 행사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북한인권 관련 전시를 통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지역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9.28.)



독일 지역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11.9.)

재외동포 대상 현지 한인 언론사 칼럼 게재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2024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4개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칼럼을 게재하여 동포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절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①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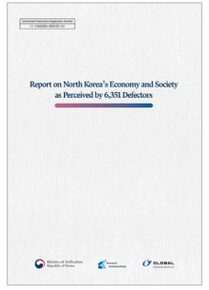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의 경제, 사회, 주민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보 공개 우려 및 일부 내용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수년간 사업이 추진되면서 축적된 조사 결과의 공개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10년 이상 조사 결과를 축적하면서 자료의 신뢰성·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알리고 학계의 북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개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가 최초로 공개 발간되었고, 8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및 리플릿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및 리플릿

에는 영문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부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정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책자 및 리플릿을 국내 유관기관, 연구소, 주한 외국공관과 재외공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 배포하고, 누리소통망(SNS) 및 강연 등을 통해 널리 확산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내외 언론, 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소개, 인용되고 있으며,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② 북한정보포털 활성화

정부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2013년에는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와 시스템을 보강해 왔다. 초기부터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동향,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야별 현황, 인물, 사전, 통계, 간행물, 영상 등 다양한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북한 TV 프로그램 편성표, 권력기구도, 북한 주요행사 일정 등의 부가 서비스 및 북한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할 수 있는 북한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북한정보포털 화면

한편, 정부는 2023년 12월 북한정보포털을 빅데이터 및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서 성능 개선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 및 이용도를 크게 향상하였다.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적용하여 168개 국내외 정부·연구기관·언론에서 생산한 객관적인 공개 북한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유사기사 분류, 자동번역, 키워드 분석, 인물인식, 활동 통계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북한정보포털 내 공개자료 중 텍스트 형식의 『북한 이해』(국립통일교육원 발간 책자) 내용을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등 시각화 콘텐츠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는 내외신 기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북한정보포털의 이용률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정보포털의 일평균 접속 건수는 2023년 9,092건에 비해 1만 9,05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북한정보포털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북한자료센터 서비스 확대

정부는 1988년 「7·7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 원전 및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이하 '자료센터')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료센터는 국민의 북한 이해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 정보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북한 전문 도서관으로서 대국민 북한 정보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통일·북한 관련 단행본 8만 5,000여 권, 정기간행물 1만 5,300여 권, 통일부 발간 도서 7,200여 건, 비도서 자료 1만 8,700여 건 등 총 12만 6,000여 건이며, 이 중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는 4만 5,380건이다. 이는 2023년도 4만 1,800여 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24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신 북한 자료를 대폭 확충한 결과이다. 특히, 2024년에는 북한 『조선명승지도감』 등 단행본 683점, 『대중체육』 등 정기간행물 1,802점 등 총 2,485점의 전자자료를 새로 입수하였다.

북한 발행 자료 보유 현황 (2024년 12월 말 기준)

(단위: 건)

유형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자료	계
보유건수	25,617	5,270	14,493	**45,380**

자료센터는 2010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센터 방문 이용자가 손쉽게 통일·북한 원문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새로 입수한 전자자료와 자료센터 소장의 종이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로동신문』 등 신문 5만 9,524호, 잡지 1만 8,074호, 교과서·단행본·연감 6,694권, 영상 4,081편 등 총 9만 2,521건을 서비스 중이며, 2024년에는 자료센터가 소장 중인 『경제연구』 등 정기간행물 5,100여 점(42만 1,200여 면)을 디지털화하였다.

한편, 2024년에는 인천공항세관에 보관 중이던 1970~1980년대의 북한 자료 156점을 관세청의 협조하에 자료센터로 이관하는 등 북한 자료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신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북한에서 방송된 조선중앙TV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 실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료 소실 방지를 위해 파본 자료 약 60권(6,270면)의 복원 및 수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 메인 화면



정보교류 협력기관 연결 화면

자료센터 누리집(unibook.unikorea.go.kr)에서는 소장자료 및 기사 목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 영화 소개와 북한 교과서, 북한 만화 소장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일부 발간 자료 7천여 건과 통일연구원 발간 자료 3천여 건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자료센터와 정보교류 협력기관(통일연구원 등 30개)을 누리집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원문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료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통일·북한 관련한 학술DB 9천여 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원문DB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료센터는 7천여 편의 북한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북한 실상 이해를 돕기 위해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을 읽다'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6월에는 9개 지역 통일관과 협업하여 통일문고 운영, 북한 영화 상영, 통일그림동화 및 남북회담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하반



'통일을 읽다' 행사(6.13.)



'北 & BOOK' 토크(10.26.)

기에는 탈북작가 작품 전시 및 탈북작가와 함께하는 '北&BOOK' 토크를 개최(10.26.)하여 북한 실상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정부는 현 북한자료센터의 장기간 임차 운영 문제 해소와 부족한 열람 공간 확충,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연면적 8,463㎡,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인근 소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본격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준공, 2027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개관되면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통일사료관 등 통일·북한 관련 전문도서관 본연의 기능은 물론이고 일반 공공도서관으로서 학생, 주민, 국내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조감도

제4절 통일법제 기반 구축

정부는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및 법치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민간 법제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통일부는 민간 법제 전문가,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통일법제 연구 노력을 공유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2009년 통일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연구 과제를 논의하는 등 통일법제 체계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실질적으로 조율하였다. 2024년에도 통일법제추진협의회를 대면회의 3회(3.26., 6.27., 9.24.), 서면회의 1회(11.15.~21.) 개최하여 통일 준비를 위한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분야별 미비점 및 입법적 보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2013년부터 매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통일법제와 관련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하였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12.5.)

다. 2024년에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통일법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12.5.)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각 부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법제 연구 생태계 활성화 및 신진연구자 육성 차원에서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함께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매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도 통일법제 관련 분야 박사급 연구진의 참여하에 통일부-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11.8.)하였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북한 법제 변화를 통해서 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12.10.)하여, 최근 북한법의 제정·개정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공동학술대회(11.8.)



'북한 법제 변화를 통해서 본 북한 사회의 변화' 공동학술세미나(12.10.)

제5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91년 정부 출연으로 25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최초로 조성하였고, 그 이후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2024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7,965억 원이며,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및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을 출연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20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억 4,000만 원과 증권사 등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32억 원 등 총 1,634억 원을 회수하였고, 자체 수입은 사업비 정산 환입 등 131억 원이다. 한편,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어 국민이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금액을 기금 수입 항목에 기부 목적에 따라 적립할 수 있게 되었고,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사)탈북자동지회가 통일 염원과 의지를 모아 각각 기부금을 기탁하였다. 기부금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 여건 조성 시 그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며, 이는 남북 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9~2024년 남북협력기금 수입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9	'20	'21	'22	'23	'24
정부 출연금	1,000	1,500	1,000	1,000	572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여유자금 회수	846	624	1,419	1,763	1,625	1,634
자체 수입	132	331	140	95	132	131
합 계	**4,008**	**7,941**	**4,929**	**3,913**	**6,629**	**7,965**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24년 총 1조 5,841억 원(사업비 8,722억 원 포함)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331~336차, 총 6회) 및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제199~205차, 총 7회)를 개최하여 총 396억 원의 기금 사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2024년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현황

(단위: 백만 원)

안 건	금액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4,592
2024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33
2024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621
2024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098
2024년 DMZ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499
2024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994
2024년 대북 반출물자 전략물자 전문판정 업무위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21
2024년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현장유지·관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69
2024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155
2024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5,16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7,289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610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12
2024년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49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81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및 업무 이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00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관련 대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9,530
총 의결액	**39,555**

의결된 기금 사용 계획에 따라 총 222건의 사업에 총 329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도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주 대상이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항목에서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서 총 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총 3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왔던 교육학술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에 23억 9,800만 원, 문화유산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관련 디지털 복원 및 디지털 기록관 운영 지원'에 7억 1,500만 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사업 지원'에 3억 7,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 항목에서는 총 1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비용 등으로 8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외 이산가족 신청자 대상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지원'에 7

2024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77건	4,220	통일정책 (77건, 4,220)
2024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4건	2,398	남북 사회문화교류 (16건, 3,486)
2024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4건	122	
2024년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4건	373	
2024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4건	593	
2024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 2건	80	인도적 문제 해결 (11건, 2,426)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 지원 2건	285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지원 2건	538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1건	760	
2024년 대북 인도지원 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지원 4건	763	
2024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지원 4건	3,23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18건, 22,855)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대금 지급 1건	9,009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현장유지 관리 지원 1건	23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및 업무 이관 관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원 2건	300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지원 14건(이월)	3,150	
2024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지원 66건	1,192	
2024년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12건	474	
2024년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사업 지원 13건	43	
DMZ 마을 실태조사 및 재현 용역 지원 1건(이월)	58	
2024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4건	5,168	
총 집행액	**32,987**	**총 222건**

※ 사업별 집행액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 집행액과 다를 수 있음.

억 6,000만 원,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항목에서는 총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업무 지원 및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대북 지원 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항목에서는 총 17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에 35억 3,100만 원,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31억 5,000만 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운영 사업'에 11억 9,200만 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현장유지 관리'에 2억 3,100만 원,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외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대금 지급'에 90억 900만 원, 'DMZ 마을 실태조사 및 재현 용역'에 5,800만 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4,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지원' 항목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 5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에 5,71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는 2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2019~2024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9	'20	'21	'22	'23	'24
사업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70	32	31	29	34	42
	남북 사회문화교류	37	43	35	34	35	35
	인도적 문제 해결	358	151	40	44	17	24
	남북경제협력	197	128	122	325	67	177
	개성공단지원	88	88	84	347	71	52
	소 계	**750**	**442**	**312**	**779**	**224**	**330**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2,610	6,056	2,831	1,486	4,748	5,712
여유자금 운용		624	1,419	1,763	1,625	1,634	1,901
기금 운영비		24	24	23	23	23	22
합 계		**4,008**	**7,941**	**4,929**	**3,913**	**6,629**	**7,965**

05

통일교육

제1절 | 통일교육 기반 확충

제2절 |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제3절 |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제4절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제5장
통일교육

정부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의 원내 교육과정과 이러닝 과정, 학교·지역사회 통일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통일 준비 역량을 제고하였다. 특히, 미래세대가 통일의 희망과 비전을 갖는 것이 통일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분단, 안보, 통일 관련 현장을 탐방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디지털 인증과 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현장견학의 재미를 배가하는 전용 인증앱 '유니투어'를 공식 출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 교재 2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도서는 물론이고 TV·유튜브 채널과 협업 영상,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유아·어린이, 장애인, 재외동포 등을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도 제작·배포하는 등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2030세대 대상으로는 '2030 통일 골든벨', '2030이 바라보는 통일 발표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5.20.~26.)에는 '2030 자유이야기 토크쇼', 가족 중심 주말 참여행사 '통일 드림랜드' 등 새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등을 통해 전국 일선 학교에서 참여형·맞춤형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역사회의 통일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위촉된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실상에 대해 알리는 '통일 부스'를 운영하였다. 지역 통일관 중 한 곳인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2024년 1월 1일 입장료 무료화 이후 연간 방문객이 2023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고, 외국인 방문객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 대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탈북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국제 청년 통일 프로그램' 등 계기별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개방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① 통일교육 방향 정립과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교육 방향을 정립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기본계획의 6개 정책과제로 통일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미래세대 자유민주 통일인식 제고, 지역사회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체험형 콘텐츠 개발·확산, 국내외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기관별 통일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운 통일교육의 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통일교육 관련 협력체계를 국내외로 적극 확장하였다. 2024년 3월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통일 분야에는 4개 분야 전체 신청자의 41%인 70명이 접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예선 서류심사, 본선 대회를 거쳐 3월 26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결선 대회가 진행되었다. 최종 수상자 4명에게는 상금 외에도 통일교육위원 위촉, 통일교육 관련 특강 기회 부여, 통일교육 유튜브 콘텐츠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극동방송 라디오와 협업하여 신규 코너 '북한 실상 6351'을 진행하였다. 북한 전문가인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매주 북한 주민의 생생한 생활상을 전달하였으며, 첫 회와 마지막 회에는 통일부장관이 특별출연하였다.

재외 한국·한글학교 단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일교육 네트워크도 확충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은 6월 4일 재영한글학교 협의회, 11월 12일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통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우리 사회 내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아가 통일미래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통일미래의 주역이 될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부터 사회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립통일교육원이 실시한 6개의 전문과정, 4개의 단기과정 등에 총 5,431명이 참여하였다. 사이버(이러닝) 통일교육은 공공과정, 교원과정, 마이크로러닝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44만 6,418명이 참여하였다.

2024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 과정	전문과정(6개)	단기 과정(4개)				특별과정	이러닝 통일교육과정	합계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인원	307	1,128	1,695	1,331	571	399	446,418	**451,849**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북한이탈주민전문강사과정

등 6개 과정이 있으며 총 307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우리 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 32명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범정부적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을 대상으로 1년 장기교육인 통일정책지도자과정을 운영하였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재난 안전, 기후 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 등 다부처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4~5급 상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을 통하여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급 통일 전문 인력 23명을 배출하였다.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에서는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통일미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2030세대 전문가 42명을 양성하였다.



통일정책지도자과정
(1.22.~11.29.)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2.16.~11.7.)



통일정책최고위과정
(7.11.~9.19.)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일선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현장에서 통일·북한 문제를 주제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북한이탈주민전문강사과정을 개설하여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강사가 국민에게 북한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 간에 상호 소통과 정보 교류 및 강의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7월, 11월)하였으며, 전문 강사의 국제적 감각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우수 전문 강사 해외연수를 실시(9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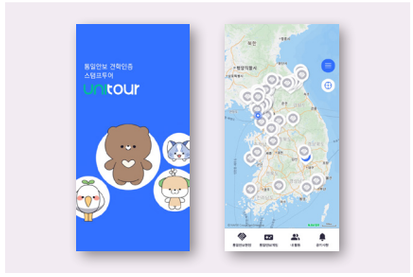
단기과정으로는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통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광역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을 통해 통일교육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은 각급 학교 교사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장(감) 및 교사,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차별화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 통일단체 및 종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이 과정은 남북관계 현안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에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통일교육 방식을 벗어나서 분단, 안보, 통일 관련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접경지역과 같은 전통적인 통일안보 현장견학 장소 외에 하나원, 남북관계관리단,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센터 등 전국 각 지역 테마·권역별로 통일안보 현장견학 코스를 발굴·선정하였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현장견학을 10회 진행하였으며, 총 405명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63회의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5,933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또한, 통일안보 현장 방문을 인증하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유니투어(UniTour)' 앱을 개발하여 함께 활용하였다. 전국에 분포한 전쟁과

분단, 평화와 통일 관련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배우며, 스스로 느끼는 자기주도적 체험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통일안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일반인이 평소에 방문하기 힘든 통일부 소속기관 방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제1차 통일안보 현장견학 발대식(5.20.)



'유니투어' 앱

2024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참여·체험형 사업 'DMZ 통일 걷기'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45명이 6박 7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6개 군을 횡단하며 분단 현실을 실감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걷기 종료 후인 야간에는 북한 실상·북한인권 토크콘서트,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특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협업으로 체험



2024 DMZ 통일 걷기
발대식(10.19.)



2024 DMZ 통일 걷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방문(10.24.)

형 통일교육을 운영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 이래 2024년 말까지 1만 931명의 방문객이 판문점을 다녀갔다. 2023년 7월 주한미군이 판문점 견학 과정 중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단되었던 일반견학은 2024년에도 재개되지 못하였다. 다만,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을 통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 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 일행의 방문이 이뤄졌다. 정부는 1년 이상 중단된 판문점 견학의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적 수요를 고려하여 당초 10월부터 통일부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을 재개하기로 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남북 간 긴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특별견학 재개를 보류하였다.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은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통일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개설되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4년에는 미국, 독일에서 3명의 전문가가 국내 전문가 및 학생·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총 30회의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총 907명이 참가하였다.



제1차 해외 초빙교수 시드니 사일러
한백통일재단 특강(6.12.)



제2차 해외 초빙교수 마그누스 브레히트켄
한라대 특강(11.28.)

또한, 정부는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였다. 11개국에서 12명의 학자, 공무원 등이 참가한 2024년 프로그램에서는 서울, 인천, 파주, 연천 등 한반도 곳곳의 통일·안보 현장을 견학하고,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펠로십과 연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를 더욱 생생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체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주한 외국인, 해외 대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13회의 단기 글로벌 과정을 운영하여 559명이 참가하였다.



주한 외국인반(2.22.)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 수료식(7.25.)



재외동포반 글로벌 가족통일캠프(8.6.)



유럽 지역 해외 대학생반(8.19.)

이러닝(E-learning)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및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과정, 교사를 위한 교원과정, 마이크로러닝, 방북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공공과정에서는 '헌법으로 본 통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협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등 40여 개 과목을 운영하였다. 교원과정에서는 '통일의 첫걸음, 통일교육', '콘텐츠와 사례로 보는 통일교육 길라잡이', '문학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등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전달하였다. 마이크로러닝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주제를 담은 짧은 영상 형태로 북한, 통일, 국제 정세, 인문교양의 내용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방북교육과정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서 방북 절차, 북한 방문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에도 시의성 있고 전문성을 갖춘 신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기존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사용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닝 콘텐츠(헌법으로 본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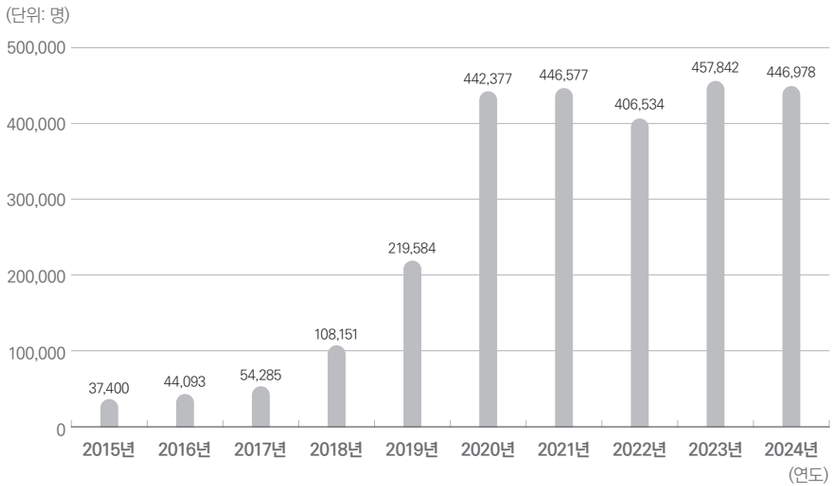


이러닝 콘텐츠(통일의 첫걸음, 통일교육)

이러닝 통일교육은 2020년 44만 2,377명, 2021년 44만 6,577명, 2022년 40만 6,534명, 2023년 45만 7,842명, 2024년 44만 6,978명이 이수하여 5년 연속 40만 명 이상의 이수 인원을 기록하였으며 국민 통일교육의 중요한 통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2024년 4월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의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러닝의 수요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편리한 검색과 정보제공을 통해 사이버 통일교육 부문의 대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닝 통일교육 이벤트 실시, 다과목 이수자 등 우수 교육생을 위한 상·

하반기 통일 현장 체험 운영 등 이러닝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도별 이러닝 통일교육 이수 현황



③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정부는 1972년부터 통일 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24년에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 교재 2종을 각각 3만 부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도서관, 통일교육 단체 등 1만 6천여 개 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교재 또는 참고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참고도서도 제작하였다.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 사회 및 생활 실상을 주제로 한 『청소년 북한 인사이드』, 통일·북한 전문가의 대학 특강을 엮은 『미래세대 통일 특강』을 발간하였으며,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통일』 등 일반인 대상 통일 인문도서도 발간하였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통일 그림동화 『참매 나나의 선택』과 통일 놀이북 『출발! 한반도 자유 탐험대』, 재외동포 어린이 통일교육 교사용 지도서 『통일아 안녕(Hello! Unified Korea)』도 제작하였다. 5월 통일교육 주간에는 학교·사회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표준 강의안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24 통일교육 기본 교재





통일교육
그림동화



재외동포
통일교육 지도서

정부는 또한 학교·사회 통일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우선, 초등 교과와 연계하여 분단 과정, 통일미래 등을 주제로 약 5분 분량의 클립 영상을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학교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성인 대상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인



초등 교과연계 클립영상



공공 통일교육용 영상

권과 통일·안보를 주제로 영상 교육자료 2종도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3년에 제작한 통일교육 그림동화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 및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방영하였다. 통일교육 주간을 계기로 JTBC '차이나는 클라스'(5.19. 방영)에 통일부장관이 출연하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고,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제작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7.14. 방영)에서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국민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유튜버 등과도 협업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의 분야별 실상을 조명하는 영상을 제작·송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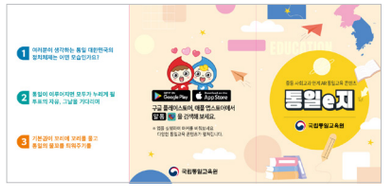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3회(5.19.)



유튜브 「교양만두」 협업 영상
'북한의 리얼 일상생활'

정부는 2022년부터 통일교육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2024년에는 중등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남북한의 정치체제, 선거제도, 기본권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와 증강현실(AR) 교보재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북한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콘텐츠인 '북한에서의 하루'를 제작하였다. 또한, 어린이용 통일교육 그림동화에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놀이형 독서 앱 '통일교육 그림동화 도서관'을 개발하였다.



중등 교과연계 영상
증강현실(AR) 교보재



'북한에서의 하루'
가상현실(VR) 콘텐츠



'통일동화숲'
확장현실(XR) 앱

2024년 제작 통일교육 콘텐츠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도서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 △국제 정세와 통일 환경 △남북관계 △통일정책 및 통일 방안 △통일 비전과 과제	대학생 성인
	『북한 이해』	△북한 이해의 관점 △정치체제 △대외관계 △군사 △경제 △사회와 주민생활 △문화, 언론, 교육	대학생 성인
	『참매 나나의 선택』	참매 나나가 왕실 사냥매 학교의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비행함	아동
	『통일아 안녕』 지도서	재외동포 아동용 통일교육 교재(2023년 발간) 교사용 지도서	아동
	『청소년 북한 인사이드』	북한 사회 전반 및 생활 실상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	중학생
	『미래세대 통일 특강』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정책 등 소개	대학생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통일』	△인권, 평화, 통일의 관계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노력 △북한인권 증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	대학생 성인
	『북한사회와 법-사회 통제를 중심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주요 주민통제 법제 해설	대학생 성인
영상	교과연계 클립영상(5종)	△분단 과정 △국군포로·납북자 △북한인권 △통일 방안 △통일미래	초등
	공공 통일교육 영상(2종)	△북한인권 바로알기 △안 보여 안보! 보이는 통일 퀴즈쇼	성인
	통일교육 애니메이션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남북한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아동
	JTBC '차이나는 클라스' (5.19., 방영)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관련 특강	전국민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영상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7.14., 방영)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계기,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강조	전국민
	유튜브 협업 영상(8종)	유튜브 「교양만두」, 「배나 TV」 등과 협업, 북한 실상 관련 영상 제작	전국민
실감형 콘텐츠	중등 교과연계 영상 및 증강현실(AR) 교보재	중학교 사회교과와 연계, 남북한 △정치체제 △선거제도 △기본권 비교	중등
	'북한에서의 하루' 가상현실(VR) 콘텐츠	남한의 청소년이 타임루프 오작동으로 북한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북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노력동원, 사회통제 등을 체험	초~중등
	'통일동화숲' 확장현실(XR) 앱	'남떡 북떡 쑥떡쑥떡'(2022년 제작 그림동화)을 기반으로 한 놀이형 독서 앱 * 과거 개발한 그림동화 6종도 탑재	아동

또한, 정부는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고자 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카카오톡 등 5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정책 고객과 소통하였다. 미래세대 등이 호응하기 쉬운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짧고 유익한 지식 콘텐츠로 제작하여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명사 초청 특강'(통찰: 통일에 대한 성찰), 북한이탈주민 자서전 및 『북한인권보고서』 등 '도서 소개'(통일 책방),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국제이슈'(통일지식 뇌벨업), '남북의 미래세대 간 대담'(남북MZ 토크) 등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짧은 교육 콘텐츠를 총 54편 제작하였다. 2024년 5개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한 결과 총 구독자 수는 2023년 6만 1,005명 대비 42.5% 증가한 8만 6,934명이었으며, 유튜브 콘텐츠의 총 조회 수는 2023년 16만 7,153회 대비 13% 증가한 18만 8,558회를 기록하였다.



통일교육 뉴미디어 영상(통일지식 뇌벨업)



통일교육 뉴미디어 영상

④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운영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제12회 통일교육 주간(5.20.~26.)에는 야외 체험행사, 토크쇼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고,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5.2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는 통일 메시지 세리머니, 통일부장관 기념사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 비전을 선포하였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 공동합창단 공연, 통일안보 현장 견학 발대식과 남·북·해외 청년이 참여하는 '2030 자유이야기 토크쇼'를 진행(5.20.)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세대·인사들이 참여하여 통일 비전을 공유하였다.

통일교육 주간 최초로 주말 야외행사 '통일 드림랜드'(5.25.~26., 북서울꿈의 숲)를 개최하여 20여 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2030 통일 골든벨' 등 참여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족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5.24.),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5.25.)도 개최하였다.



2030 자유이야기 토크쇼(5.20.)



50초 쇼츠 영화제 시상식(5.24.)


통일 드림랜드(5.25.~26.)

정부는 통일교육 주간 전용 누리집(5.1.~6.30., 8주간)을 통해 학습강의안, 클립영상 등을 제공하고 '통일 메시지' 남기기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15만여 명이 누리집을 방문하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소통하였으며, 국립통일교육원 캐릭터 '유니프렌즈'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주간을 계기로 통일부장관과 차관이 직접 일일 통일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소통하였고, 통일부 실·국장들도 '늘봄학교' 일일 통일교사로 활동하여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와 늘봄학교 안착을 지원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통일교육 연구학교도 통일교육 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8개 대학은 통일염원 뮤지컬 공연, 통일 음악회, 북한음식 체험, 통일 모의국무회의, 통일담론 콜로키움, 명사 초청 특강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거나 정규 교과와 연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주간 전·후로 자체 통일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안보 페스티벌, 대학생 토크콘서트, 통일 순회강좌, 통일 합창제, 통일염원 한마당 축제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지역 통일관은 북한 실상과 통일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서울통일교육센터와 함께 북서울꿈의숲에서 통일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
메인 화면



누리집
참여 이벤트



누리소통망(SNS)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

⑤ 통일교육연구센터 활동 강화

정부는 통일교육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 방향성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통일교육원 내에 원내 교수 9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를 2020년 12월 설치하였다.

센터는 2024년에 통일교육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대내외 협업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학술행사 개최, 저널 『통일과 담론』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청년과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방안과 첨단기술 기반의 현장형 통일교육 방안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8.15 통일 독트린과 미래세대 통일교육')을 추진하였다.

센터는 학술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학계·교육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하반기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서는 통일 준비 및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역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계기
상반기 학술행사(5.22.)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주제
하반기 학술행사(12.4.)

할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 강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2월에는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을 주제로 젊은 세대를 위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개념을 접목하여 재미있고 매력적인 통일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저널 『통일과 담론』 상·하반기 호(5월, 12월)를 발간하였다. 저널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현실 문제에 대한 담론(상반기),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국제관계 변화(하반기) 등 '특집 기획', 해외 전문가의 국제 정세 관련 이해와 분석을 담은 '글로벌 인사이트', '일반 논문'과 '리뷰' 등 학계와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과 연구가 폭넓게 수록되었다.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①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정부는 2024년에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810회 강의를 진행하고 5만 1,117명의 학생에게 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개별학교를 방문하여 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교구재 등을 활용한 참여형·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통일 체험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총 334회 운영하여 체험교육 경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2023년 수능시험 후 자기계발 시기에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진행한 체험교육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총 4회 306명이 참여하였다.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7.18.)



'학교 통일 체험교육'(11.21.)

통일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일인식을 높여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1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10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기자단은 발대식(5.25.)을 시작으로 월별 기사 작성, 통일 관련 행사 참여, 여름캠프(2회), 권역별 현장견학(5회) 및 크리에이터반 운영 등 통일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이 통일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11회 청소년 통일 문화 경연대회'도 개최하였다. 2024년에는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9.11.),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5.24.) 등 2개 부문으로 운영하였다.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에는 174곡이 응모되어 9곡이,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에는 280편이 응모되어 1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여름캠프(8.14.)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9.11.)

② 학교 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정부는 학교 통일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전국 초·중·고교 중 31개를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로 지정하였다.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신규 지정 학교에 대한 컨설팅 수행, 통일교육 학습콘텐츠 및 자료 지원 등 연구학교 운영 지원에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2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11.15.)하였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27편이 출품되었으며, 'We Are The One 프로그램으로 평화통일 핵심역량 기르기' 등 4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정부는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함께하는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개최(12.27.)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각급 학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통일교육 담당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통일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6.17.)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발표심사(11.15.)

③ 대학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대학생의 통일에 관한 관심 제고 및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주요 권역별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6개 대학(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으로 시작하였다. 2024년

에는 수도권 3개 대학(국민대, 이화여대, 한양대), 비수도권 4개 대학[강릉원주대, 동아대, 고려대(세종), 원광대], 1개 교육대학(공주교대) 등 총 8개 선도대학을 운영하였다.

선도대학은 전공 개설, 교양필수 도입, 교양·전공 교과목 운영, 교재 개발 등 대학 통일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교과 이외에도 각종 공모전과 토론대회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통일음악회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은 대학생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24개 대학에 42개 사업(통일특강 18개, 통일강좌 24개)을 실시하여 7천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간 연합학술회의(8.7.)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통일·북한 문제 관심 제고와 대학(원)생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논문 공모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제43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에는 26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12.6.)되었다. 논문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교육 대학연합 학술회의(8.7.)



제43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 (9.2.~10.11.)

④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2030세대의 통일 관련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통일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2030 통일 골든벨'과 '2030이 바라보는 통일 발표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30 통일 골든벨'은 통일교육 주간인 5월 25일 북서울꿈의숲 창포원에서 개최되었다. 사전에 모집한 2030세대 참가자들은 정부가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 교재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스스로 학습한 뒤 통일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출제한 북한 실상과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풀었다.

'2030이 바라보는 통일 발표대회'는 9월 28일 선유도공원(서울) 야외 원형무


'2030 통일 골든벨'(5.25.)



'2030이 바라보는 통일 발표대회'(9.28.)

대에서 개최되었다. 예비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7개 팀의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프레젠테이션, 공연, 연극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각 팀은 무대 발표 후 통일에 대한 비전을 관객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AI 통일미래 사진 공모전', '2030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토크쇼', '통일도서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제3절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센터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권역(서울·경인·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제주)에서 지역센터가 새로이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2024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지정 기간: 2024.3.~2026.2.)

권 역	센터명	지정 기관
서울	서울통일교육센터	총신대학교
경인(경기, 인천)	경인통일교육센터	아주대학교
경남(부산, 울산, 경남)	경남통일교육센터	창원대학교
경북(대구, 경북)	경북통일교육센터	대구대학교
전남(광주, 전남)	전남통일교육센터	세한대학교
전북	전북통일교육센터	우석대학교
충남(대전, 세종, 충남)	충남통일교육센터	단국대학교
충북	충북통일교육센터	청주대학교
강원	강원통일교육센터	한라대학교
제주	제주통일교육센터	제주대학교

2024년 각 지역센터는 권역 내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역 통일관,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인 '지역통일교육 협의회'를 중심으로 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각 지역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특화·연합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에게 통일 문제 이해, 북한인권 개선, 건전한 안보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센터는 통일 강좌, 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통일 순회강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전문 강사, 통일교육위원)이 강사로 참여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해 현장감 있게 강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울센터, 서울시민 통일강좌(3.27.)



경남센터, 북한인권 음악회(5.30.)



제주센터, 제주 지역 통일교육 유관기관 공동워크숍(6.25.)



경북센터, 통일 순회강좌(7.2.)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일 문화축제, 북한인권 음악회, 통일염원 한마당축제 등 지역축제와 결합한 '특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많은 국민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지역센터가 함께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합사업'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센터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낮은 초·중·고·대학생 등 통일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통·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특히,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대학생 통일 토크콘서트', 남북 청년으로 구성된 '한비톡 기자단' 출범, 통일문화확산 'SNS 경연대회'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획사업이 추진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22만 명의 지역 주민이 지역센터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경남센터, 대학생 통일토크콘서트(5.20.)



경인센터, 한비톡 기자단 제작 영상

아울러, 정부는 지역센터가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점으로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개최, 통일 순회강좌 표준강의안 배포, 지역센터 운영 매뉴얼 발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역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하였다.

②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987년부터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2024년에는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총 1천 명을 위촉하였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은 국내 809명, 해외 19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657명(65.7%)이 2024년 새롭게 위촉되었고, 미국에 오렌지·샌디에이고 협의회와 필라델피아 협의회를 신설하였다. 통일교육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2024.5.1.~2026.4.30.)이다.

제24기 지역별 통일교육위원 위촉 결과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합계
인원	169	33	53	31	31	39	24	113	34	52	42	49	36	28	41	34	191	**1,000**

※ 해외 위원은 미국 144명(LA 50명, 오렌지·샌디에이고 15명, 뉴욕 24명, 필라델피아 28명, 워싱턴 27명), 중국 15명, 일본 20명, 독일 12명 등 총 191명

지역별 통일교육위원 회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6월 26일 제24기 통일교육위원 회장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통일교육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일교육위원 회장단 전체회의(6.26.)

통일교육위원은 국내(4회, 860명 참여)와 해외(11.16. 필라델피아, 102명 참여)에서 통일부스를 운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실상에 대해 널리 알렸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위원으로 선발된 162명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눈높이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LA 협의회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청소년 그림공모전'(2024.11.29.~2025.1.23.)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이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원내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국내 통일교육위원은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신규 교육(4회, 105명)과 보수 교육(2회, 61명)을 이수하였다. 해외통일교육위원은 국내로 초청하여 3박 4일간(9.23.~26., 36명) 국립통일교육원 원내 교육과 접경지역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2024년 신설된 필라델피아 해외지역협의회 대상 정책 설명회(11.15.)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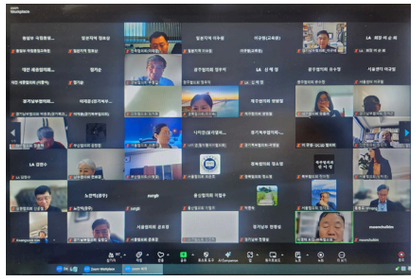
LA협의회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청소년 그림공모전'(2024.11.29.~2025.1.23.)



해외 통일교육위원 대상 국내 교육(9.26.)

또한, 전체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총 3차례의 온라인 명사특강을 실시(10.24., 11.14., 12.5.)하였으며, 통일교육위원이 교육·강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스피치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

(8.13.)하였다. 통일교육위원에게 통일부 발간 도서와 자료, 뉴스레터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해외 위원이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이러닝 통일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온라인 명사특강(12.5.)



통일교육 스피치 경진대회(8.13.)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활동 공모를 통해 선발·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로 국한되어 있던 지원단체 자격 범위를 2024년부터 모든 단체와 법인으로 확대하여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024년 정부는 10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에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안보 현장 체험, 인권다큐·연극·뮤지컬·영상미디어 제작, 토크콘서트·백일장·사생대회, 해외



조국순례 뚜벅이걷기(7.13.~14.)



제9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기원
전국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8.24.)



(사)희망의소리,
2030 자유이야기 토크쇼(5.20.)



통일교육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12.12.)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단체별로 특화된 현장형 통일교육 활동을 총 287회 실시하였으며, 2만 1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통일교육 민간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참여단체 간 연대사업도 추진하였다.

③ 지역 통일관 운영 활성화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통일정책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서 현재 전국에 13개 통일관이 운영 중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설치하여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통일관은 민간·지자체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통일 문제를 주제로 패널·체험형 콘텐츠 등을 전시하여 전망대를 방문한 국민에게 다양한 통일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통일교육 현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통일 비전 설명과 『2023 북한인권보고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8.15 통일 독트린」 내용을 패널로 제작하여 전시하였으며, '천체망원경으로 북한 지역 살펴보기', '통일가훈 써주기', '북한인권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북한 모습을 전국 통일관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도 구축



상설전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통일가훈 써주기(10.19.)



기획전시(2024.10.~2025.3.)



전망대 외국인 방문객

하였다. 또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뒤뜰에서 '자유를 향한 용기'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연말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령자를 초청하여 위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무료화를 통한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연간 방문객이 2023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방문객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13개 통일관에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 실상 관련 다양한 전시자료와 체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에 따라 통일관의 주요 관람층인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전시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문도 병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상설 전시

하였다. 더불어 호남 통일+센터를 전남통일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통일관은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북한 실상과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도전 골든벨', '찾아가는 통일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지역 주민이 가족·학교 단위로 참여하였다. 2024년 통일관 관람객은 약 139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약 131만 명에 비해 약 8만 명이 증가하였다.

④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14일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대상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법률에 따라 교육 대상 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매년 1회(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정부는 교육 대상 기관이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 전문 강사 명단 제공, 교육용 도서·영상 자료 등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통일교육 누리집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6년이 지나면서 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통일교육 이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 집계된 2023년 교육이수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통일 공감대 확산 행사 개최, 통일 공감대 확산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5년에도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재선정되어 지역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6~12월)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정부는 국내 유일의 정부 직영 청소년 수련 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국민에게 맞춤형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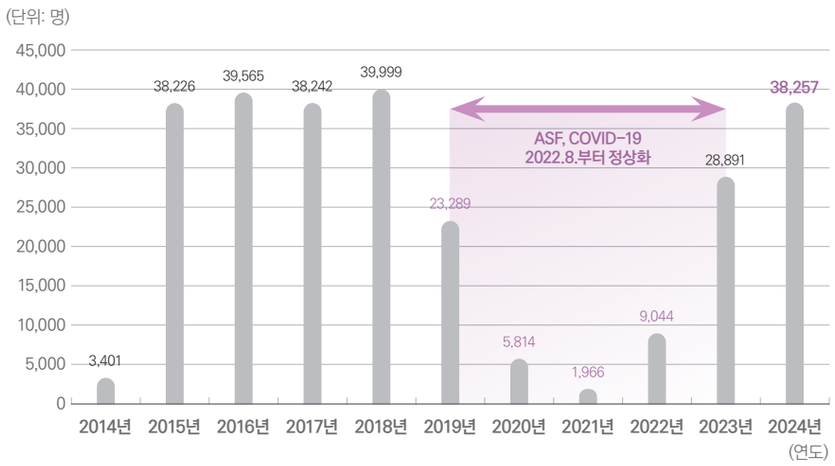
통일체험연수는 미래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신청 연수, 초청 연수와 미래센터 밖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연수, 찾아가는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연수는 학교·단체 등에서 통일체험연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초청 연수는 미래센터에서 시기별·계기별로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의미한다.

온라인 연수는 주로 도서벽지와 원거리 학교, 취약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연수이며, 찾아가는 연수는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각종 통일 관련 행사 현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4년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총 227회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인원 3만 8,257명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미래센터는 2024년에는 누적 연인원 26만 6,714명에게 통일체험연수를 제공하였다.

통일체험연수 연인원 현황



①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체험연수 확대

정부는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집한 학교(29회, 4,430명) 외 수능 이후 고3 대상(4회, 952명), 통일연구학교(4회, 660명) 등을 추가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 교육청·지자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37회, 2,958명)하여 보다 많은 초·중·고 학생이 통일체험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통일 관련 각종 행사 계기 통일체험부스를 설치·운영(6회, 9,840명)하고 일본 동경한국학교, 연천 화진초등학교 등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실시(6회, 312명)하는 등 찾아가는 연수를 추진하였다.


초등학교 대상
통일체험연수(10월)


통일연구학교 대상
통일체험연수(11월)


수능 이후 고3 대상
통일체험연수(11월)


「통하나봄」 통일체험부스(6월)


늘봄학교(6월)


일본 동경한국학교(11월)

온라인 연수는 전국 취약계층 청소년(1회, 1,000명), 원거리 학교(5회, 179명) 등 총 6회 1,1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② 통일체험연수 대상 다양화

정부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생·북한이탈주민·군장병·지역 주민·재외동포·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통일 문제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이화여대, 대구대, 한양대 등 대학생(8회, 975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탈북청소년에게는


군장병 대상 통일체험연수(3월)



재외동포 대상 통일체험연수(6월)

통일인식 제고와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교실, 소통·화합 캠프, 체육행사 등 다양한 사업(14회, 2,512명)을 추진하였다.

미래센터 인근 군부대 장병을 초청(11회, 1,027명)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위원, 해외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통일체험연수를 진행(4회, 633명)하였다. 또한, 주한 유학생과 외국인을 대상(9회, 545명)으로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 내 각종 사업과 연계하고, 지자체(12회, 1,599명), 통일 유관기관(7회, 748명)과 협업하여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③ 계기별 특별행사 기획·추진

정부는 시기별, 계기별로 의미 있는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미래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완료를 계기로 남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일일축구교실'(6.29.)을 개최하였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남북 청년 연합캠프'(8.8.~10.), '탈북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10.17.~18.) 등을 개최하여 탈북 청년·청소년과 소통과 화합, 통일을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유엔 참전국 9개국을 포함한 총 20개국 주한 유학생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6.25.)하였으며, 주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강연과 밀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국제 청년 통일 프로그램'을 기획·추진(12.10.~12.)하였다.



일일축구교실
(6.29.)



남북 청년 연합캠프
(8.8.~10.)



탈북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10.17.~18.)



주한 유학생 통일체험 연수(6.25.)



국제 청년 통일 프로그램(12.10.~12.)

④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정부는 대상별, 일정별로 12개 통일 관련 단위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맞춤형 체험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체험연수 참여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통일달력 만들기)을 폐지하고, 분야별 북한 이해를 위한 방탈출 게임형 프로그램(리멤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과 통일 한반도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연수 참여자가 모둠별로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내찍내편



게임형 프로그램(리멤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찍내편 숏폼투어

통일체험연수 단위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실내	통일로 가는 길	초·중	분단 현실, 북한 실상, 남북관계 등을 이해하고, 통일퍼즐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통일 ON	중·고	보드게임(텔레스트레이션) 방식을 통해 분단, 북한 실상, 통일미래 관련 주요 단어와 개념을 이해
	통일미래체험	공통	KTX-통일호를 타고 분단부터 통일미래까지 시간여행(VR체험), 통일 7년 후 문화·관광·물류·자원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체험
	나는캐릭터 디자이너	초	통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캐릭터)을 미니블록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
	유니빌리지	초	통일시대의 건축물과 마을을 카프라 블록을 활용하여 제작, 이를 통해 통일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내찍내편 숏폼투어	중·고	통일 이후 한반도 여행 관련 주제로 짧은 영상(1분 내) 제작·발표를 통해 통일 한반도를 상상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 형성
	통일탐정사무소	중·고	추리활동을 통해 통일, 북한 관련 지식을 익히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도전! 통일 골든벨	공통	분단, 북한의 분야별 실상, 남북관계, 통일편익 등을 주제로 한 퀴즈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
	톡톡톡 통일세대	공통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리멤버 –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	중·고	북한의 인권·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북 과정을 방탈출 방식으로 체험해 보는 기회 제공
실외	뭉쳐야뜬다 – 통일탐사단 –	공통	투어링 미션 활동을 통해 남북한 주요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을 알고 통일 한국 여행에 대하여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야외	그곳을가다 (안보견학)	공통	오두산 통일전망대, 태풍전망대 등 안보 현장 방문을 통해 분단 현실을 이해

※ 대상별·일정별로 12개 단위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통일체험연수 진행

숏폼투어)을 개발하여 도입(8월)하였다.

한편, 통일미래체험관의 전시·체험 콘텐츠도 개선하였다. 통일미래체험관은 분단 이후부터 통일미래까지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KTX 통일호'와 자원, 물류, 관광, 문화 분야에서 통일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4대 영역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에는 'KTX 통일호'에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고, 문화 영역에서 음악과 한글을 통해 남북의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비교, 학습할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를 제작·설치하였다.



남북 모두 음악은 즐거워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글

⑤ 시민 친화적 시설로 전환 및 인프라 개선

정부는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미래센터의 시설과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대국민 개방행사를 추진하였다. 4월부터 6월, 8월과 9월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미래센터를 개방(5회, 2,119명 참여) 하고 가족·개인 단위로 방문하여 미래센터의 시설과 통일·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후 재개장(6월)을 계기로 미래센터의 야외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지역 주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제1차 대국민 개방행사 (4월)



제3차 대국민 개방행사 (6월)



제5차 대국민 개방행사(9월)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정부는 미래센터의 기반 시설과 편의·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연수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생활관의 침대 교체(5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6월), 미래센터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설치(12월)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한편,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보수·정비(6~9월), 소방훈련(7월, 9월)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수생의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의정부 소재 성베드로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2.27.)하였으며, 단순한 안내 중심의 누리집을 국민과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12월)하였다.

06

남북관계 기반 정비

제1절 | 남북대화 재개 노력

제2절 | 남북 간 협력 기반 형성

제3절 | 법·제도에 기반한 교류협력 관리

제4절 | 사회문화교류 추진 기반 조성 노력











제6장

남북관계 기반 정비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남북관계 교착 국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화 재개, 남북 협력 기반 조성, 법·제도적 관리 강화, 사회문화 분야 교류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계기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여 대화를 통한 남북 간 각종 문제 해결 및 남북 연락채널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남북회담사료 공개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여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효율화를 통해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남북경협 기업과 소통 및 지속적인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을 통해서도 남북협력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교류협력 관리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질서 있는 교류협력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대북제재 이행 및 관리 강화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협의 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 및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종교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남북교류 주체와 긴밀히 소통하였다.

제1절 남북대화 재개 노력

①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정부는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대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 주요 계기마다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2024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남북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협의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 변화 대응,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의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관련 통일부장관 브리핑(8.16.)을 통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이후 주요 계기마다 '대화협의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회담 유경험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대화협의체'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②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추진

정부는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 연락채널 중단 이후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매일 유선 정기통화(9시 개시, 17시 마감)를 위한 직통전화 호출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연락채널 중단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우리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③ 남북대화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담 의제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7.12.)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시 의제를 현행화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기관 간 협조 태세를 점검하였다.

남북 연락업무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7.10., 9.25.)하여 남북회담 개최 시 상황전파시스템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상황실 설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정부는 남북회담 상황실 설치, 남북통신망 점검, 남북출입통행 재개 대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남북회담사료 대국민 공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및 접수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해 오고 있다. 회담사료 공개는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라 전직 회담 유경험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정부는 2024년에도 남북회담사료를 한 차례 공개(7.2.)하였다. 7월에 공개된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남북체육회담(1984.4~5월), 남북적십자회담(1985.5~12월),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1985.9월) 등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회담사료를 공개(총 1,693쪽)함으로써 국민이 사료를 통해 1980년대 남북 간 진행된 주요 회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자에게도 남북회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남북회담사료 열람실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등 4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남북회담문서 열람

제2절 남북 간 협력 기반 형성

① 평화경제특구 추진

2023년 12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되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인접지역에 지정·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비전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		
목표	목표1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목표2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목표3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추진 전략	통일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국내외 기업 유치 확대	지속 가능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특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법·제도 개선
	남북 경협사업 경험 활용	지역인재 발굴 및 취업기회 확대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고시된 구역을 의미한다. 법 시행에 따라 2024년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 등 법 이행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우선,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의 전 단계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부처 차관) 및 위촉위원(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일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12월 13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이날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인 3개 광역지자체, 15개 기초지자체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포함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촉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경기도·강원도 등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평화경제특구 위원 위촉식 및 설명회(12.13.)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효율화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2024년 1월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국회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 결정에 관해 설명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 3월 28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신고를 최종 완료하였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에 따라 업무가 개시(4.1.)된 청산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청산 업무(재산 파악 및 처분,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 채무 변제 등)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청산법인 지원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지속해 왔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4.3.19. 공포)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성공단 기업 대상 서비스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요 경협기업 지원 및 소통 강화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경협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 등에 따라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재개는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및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경협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시험분석 등 분야별로 총 24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재 박람회(메가쇼, 파주 장단콩 축제 등) 참여를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홍보·판매·교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 민원 및 법·세무 분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경협기업 단체 간담회(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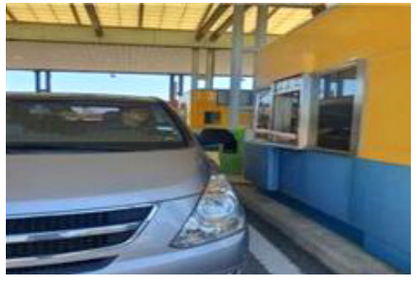


2024 제2차 메가쇼(11.7.~10.)

④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로 출입경 중단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출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 군·관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원 및 차량심사 등 모의훈련을 실시해 왔다. 2024년에는 총 27회의 훈련을 실시하여 출입경 매뉴얼 숙지, 전산장비 점검,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등을 통해 출입경 재개에 대비하였다. 특히,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4회)를 개최하여 모의훈련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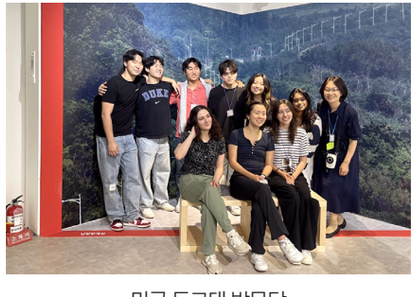
한편, 남북출입사무소는 인근에 통일전망대(도라·고성통일전망대), 제3땅굴(파주), DMZ박물관(고성) 등 국민이 많이 찾는 관광시설이 위치하고 있



경의선 운전자 방북증 검사(9.24.)



동해선 운영협의회 개최(12.10.)



미국 듀크대 방문단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방문(6.25.)



대구 지역 중등교사
남북출입사무소 방문(11.21.)

어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출입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주요 인사, 청소년, 외국인 등 총 4,966명(경의선 4,743명, 동해선 223명)이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2023.11.23., 개관)을 비롯한 남북출입경 시설을 방문하였다.

제3절 법·제도에 기반한 교류협력 관리

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대응

북한은 2024년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을 철거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도 북한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계기에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의 우리 시설 무단 가동 및 철거 등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점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3년 말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고, 10월 15일에는 철도·도로 북측 연결 구간을 폭파하였다. 이에 정부는 즉각 북한의 행위가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북한의 경의선 폭파(10.15.)



폭파 관련 정부 입장 발표(10.15.)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정부가 차관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한 자재·장비를 이용하여 추진되었던 만큼 자재·장비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② 질서 있는 교류협력 관리 및 관련 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서도 교류협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류협력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 있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을 개정(5.31.)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선하고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법률 분야 전문가 외 남북관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태료 납부 기한을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이의제기 기간(60일) 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 안전, 재산권 보호, 수해 지원 등 필수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미신고 북한 주민 접촉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다. 2024년에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총 2회 개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는 국민·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해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에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과정을 지원하였다.

③ 대북제재 이행 및 관리 강화

북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대북제재를 이해하기 쉽도록 책자 등 각종 자료를 발간하였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집』을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 불법 해상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제재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북제재 톺아보기』를 통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현황 참고집』을 발간하여 북한의 제재 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안별로 유관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11개



『대북제재 위반 사례집』



『대북제재 톺아보기』

부처와 합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2011년 1월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④ 중앙정부-지자체 간 교류협력 협의·조정 추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한 주체인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다. 4월에는 남북관계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류협력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통일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자체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사전·사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교류협력 사업 추진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지자체 업무협의(11회)를 추진하여 정부-지자체 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북한 실상 알리기 특강(2회)을 실시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 확산과 교류협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4.25.)


찾아가는 지자체 업무협의(7.5.)

제4절 사회문화교류 추진 기반 조성 노력

①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 결성되었다. 편찬사업회는 그동안 서울, 평양, 금강산, 중국(베이징, 선양, 다롄) 등에서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이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30만 7천 개의 표제어를 선정·집필하였다. 2015년 12월 이후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021년 3월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1질 10권)을 제작하고 2023년 6월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통합본)을 발간하는 등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및 『전자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목표로 편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 행사 개최 (7.9.)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 포럼 개최 (10.10.~11.)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동안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4년에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겨레말 나들이 ['말(言)들의 서울 소풍'] 온·오프라인 행사를 서울 지역에서 두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와 함께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국제학술포럼을 개최(10.10.~11.)하는 등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편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겨레말문화학교를 운영하였다. 편찬사업회를 비롯해 대학교, 각종 기관 등에서 남북 언어와 교류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였다.


겨레말문화학교 운영(4.16.)


겨레말문화학교 운영(5.8.)

②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추진되었다. 이후 8차례의 남북 공동 발굴 성과를 활용하여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manwoldae.org) 운영, 디지털 복원,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디지털 기록관은 2020년 12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3D 복원영상 등의 유적·유물자료 12만 건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18년 남북공동발굴조사 데이터 7백여 건을 신규 공개하였으며, 기록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성 만월대 창작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젊은 세대가 애용하는 AI 프로그램을 공모전에 반영하여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총 3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은 고려 황궁의 모습을 3D 데이터로 복원하여 만월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서부건축군(7~10건물지군)에 대한 고증연구·복원설계와 '개성 만월대 디지털복원 학술대회'(4.26.),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결과보고회'(11.15.),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플랫폼 알파테스트'(12.13.)를 개최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복원 설계된 건축물의 3D 이미지를 전시 체험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복원 학술대회
(4.26.)



개성 만월대 창작 이미지 공모전 포스터
(6.28.~10.6.)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는 12년간의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를 전 국민이 관람·체험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진행한 전시사업이다. 2024년에는 '개성 만월대 순회 전시: 하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역사·교육·예술 분야별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는 부산 복천박물관(4.30.~8.4.), 인천 난정평화교육원(2024.6.3.~2025.1.31.), 고려대학교 박물관(9.10.~10.26.)에서 진행하였다. 2024년까지 누적 관람객은 약 26만 명이며, 관람객 만족도는 94%에 달하였다.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4.30.~8.4.)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9.10.~10.26.)

③ 종교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북 간 단절 조치를 취하면서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사회문화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교류 재개 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다.

통일부장관은 3.1절 기념사,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 주요 계기에 종단 지도자를 예방(5회)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소통하였으며, 억류 선교사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종단별 상호 협력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직접 천태종(7.7.), 극동방송(10.15.)을 대상으로 강연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하였다.

아울러, 통일부와 기독교계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3년 설립된 기독교 정례협의회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4년에는 두 차례 회의(4.29., 10.21.)를 개최하여 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통일부차관이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기념식에 참석(4.28.)하는 등 정부는 종교계와 소통 노력을 지속하였다.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4.29.)


통일부장관, 천태종 신도 대상 강연(7.7.)


통일부장관, 천도교 윤석산 교령 예방(10.14.)


통일부장관, 천주교 이용훈 주교 예방(11.1.)

④ 기타 교류 추진

2024년 북한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자 아시아 예선전, 2024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2.3.~10.) 등 종목별 국제경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1.19.~2.1.),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2.16.~25.)와 같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출전 자격정지 해제(2022.12월)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로부터 도핑방지규약 준수국 지위를 회복(1월)함으로써 8년 만에 2024 파리올림픽(7.26.~8.11.)에 선수 16명이 참가하여 종합 6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파리올림픽에서 비록 남북 간 유의미한 접촉과 교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남북 탁구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함께 사진 찍는 장면이 AFP통신의 파리올림픽 10대 뉴스(12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이 그동안 남북 간 민간교류를 주도해 왔던 대남기구를 폐지한다고 발표(1월)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단체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향후 교류협력 재개 상황에 대비하였다.

부록

APPENDIX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
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1월

• 1.1. 대통령, 2024년 신년사

–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음."

–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임."

• 1.5.~7. 北, 서해 북방 도서 인근 해안포 사격

• 1.14.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1.15.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

–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

–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

• 1.16.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님.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임."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임.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람."

• 1.17.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2명, 기관 3개, 선박 11척)

• 1.18. 유엔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비공개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1.24.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1.28. 北, 순항미사일 발사(신포 인근 해상)

• 1.30.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2월

• 2.2.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 2.3. 통일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상징물 '세송이물망초' 공개

• 2.6.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공개 발간

• 2.14. 北,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원산 동북방 해상)

• 2.14. 정부, 한–쿠바 수교 발표

3월

• 3.1. 대통령, 제105주년 3.1절 기념사

–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임.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함."

–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임.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함."

• 3.4.~3.14. 한미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 3.18.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3.2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및 해산안 의결

• 3.20.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 공개(현지 시각)

• 3.28.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4명, 기관 2개)

• 3.28.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 부결(미국 뉴욕, 현지 시각)

4월

- **4.2.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4.2. 통일부,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입장 발표**
  -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며, 북한발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함."
- **4.3.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2명, 기관 2개, 선박 2척)**
- **4.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 **4.19.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 **4.22.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4.30.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5월

- **5.1. 유엔 회원국 50개국,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 검토' 관련 공동성명 발표 (미국 뉴욕, 현지 시각)**
- **5.10. 통일부, 北 금강산 소방서 철거 관련 대변인 성명 발표**
  -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임."
- **5.17.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원산 일대)**
- **5.24.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7명, 선박 2척)**
- **5.24.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념비 제막식(전북 군산시 선유도)**
- **5.27.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서울)**
  -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음."
- **5.27. 北, 서해상으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동창리 일대)**
  - 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정찰위성 만리경-1-1호 발사 실패 발표(5.28. 중통)
- **5.27.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념비 제막식(전남 신안군 홍도)**
- **5.28~29.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1차)**
- **5.30. 통일부,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관련 입장 발표**
  -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람."
- **5.30.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순안 일대)**
- **5.31. 유엔안보리,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5.31. 정부, 북한 대남 도발 관련 입장 발표**
  - "정부는 북한이 이번 주 들어 다량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도발 등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함."
  -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함."

6월

- **6.1~2.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2차)**
- **6.2. 정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음."
- **6.3.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6.4.(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음."
- **6.4. 정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의결 및 발표**
  -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함."
- **6.6. 대통령,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임."
  -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임.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음.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임."

• 6.8~9.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3차)

• 6.9. 정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발표

–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음.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임.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임."

• 6.9.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4차)

• 6.10. 제3차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서울)

• 6.12.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문제' 의제로 공식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6.19.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 및 러북 정상회담 개최

–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 6.20. 정부, 러북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성명 발표

–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함."

–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6.24.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5차)

• 6.25.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6차)

• 6.26.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6.26. 北, 대남 오물풍선 살포(7차)

• 6.27.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6.28. 통일부, 북측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 관련 입장 발표

–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함."

–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써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항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7월

• 7.1.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8명, 기관 5개, 선박 4척)

• 7.1.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연 일대)

• 7.11. 한미 정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미국 워싱턴DC, 현지 시각)

– "양 정상은 '워싱턴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7.14. 대통령,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 통일'이 시작될 것임."

–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임."

• 7.18.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8차)

• 7.19.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기관 1개, 선박 1척)

• 7.21.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9차)

• 7.24.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0차)

8월

• 8.1. 정부, 대한적십자사 통해 北 수해 피해 관련 물자 지원 제안

–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8.11.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1차)

• 8.15. 대통령,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8.15 통일 독트린」)

–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임."

–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임.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임."

–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음."

• **8.18.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공동성명 발표**
-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함."

• **8.19.~29. 한미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9월

• **9.3.~4.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서울)**

• **9.4.~5.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2차)**

• **9.5.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3차)**

• **9.5.~6.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4차)**

• **9.6.~7.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5차)**

• **9.7.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6차)**

• **9.8.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7차)**

• **9.11.~12.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8차)**

• **9.12.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9.13. 김정은 국무위원장,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노동·중통)**

• **9.13. 정부,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관련 입장 발표**
-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민생,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하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함."

• **9.14.~15.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19차)**

• **9.15.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0차)**

• **9.15. 대통령,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통일부 장관 대독)**
-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임."

• **9.18.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1차)**

• **9.18. 北,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개천 일대)**

• **9.20. 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억류 4천 일 계기 장관 성명 발표**
- "정부는 우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
  *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통일부 장관 성명과 동 시간대에 북한의 불법적 억류·구금 행위를 규탄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9.22.~23.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2차)**

• **9.30. 통일부 장관, 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성명 발표**
- "지난 9월 20일 미국·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10월

• **10.2.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3차)**

• **10.4.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4차)**

• **10.7.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5차)**

• **10.8.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6차)**

• **10.9.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남북 연결 철도·도로 단절 예고' 보도문 발표(중통)**

• **10.10.~11.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7차)**

• **10.11. 北, 외무성, '무인기 사건' 관련 중대성명 발표(중통, 10.12. 노동)**

• **10.11.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8차)**

• **10.15. 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 폭파**

• **10.15. 통일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 폭파 관련 입장 발표**
- "오늘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함."

• **10.16.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

• **10.17. 北, 동·서부 지역 남북 연결 철도·도로 완전 폐쇄 보도(노동·중통)**

• **10.18. 정부, 北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관련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 **10.18.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
-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을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감시에서 책임 규명으로 전환하여 행동해 나갈 것을 촉구함."

• **10.22. 정부, 北 러시아 파병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및 입장 발표**
-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음.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임."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10.19.~20.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29차)**

• **10.24. 北,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30차)**

• **10.28. 北 국방성 대변인, '무인기 최종 조사 결과' 발표(노동·중통)**

• **10.31. 北,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10.31.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음."

11월

• **11.4. 유엔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식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11.5.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사리원 일대)**

• **11.6.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11명, 기관 4개)**

• **11.7.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개최(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 **11.12.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및 서명(노동·중통)**

• **11.15.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페루 리마, 현지 시각)**
-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함."
-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함.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함."

• **11.18. 北, 대남 오물·쓰레기풍선 살포(31차)**

• **11.20. 「국제 한반도 포럼」 국외 세미나 개최(미국)**

• **11.24. 北, 경의선 군사분계선 이북 송전선 제거**

• **11.28. 北, 대남 오물·쓰레기풍선 살포(32차)**

12월

• **12.3. 통일부,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성명 발표**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가족들 간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며 우리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12.4. 러북,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 교환 및 발효(12.5. 노동·중통)**

• **12.17.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미국 뉴욕, 현지 시각)**

• **12.19.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11명, 기관 15개)**

• **12.30.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15명, 기관 1개)**

II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① 귀환국군포로 현황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연도	'94	'97	'98	'99	'00	'01	'02	'03
인원	1	1	4	2	9	6	6	5

연도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인원	14	11	7	4	6	3	1	**80**

② 납북자 현황

전시납북자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	판단불능 결정	합계
4,777	138	460	**5,375**

※ '10.12.13.부터 '17.6.12.까지 활동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시납북자 규모는 10만 명 내외로 추산

※ 납북피해 신고 접수건수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 130건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 4,777명을 납북자로 결정

전후납북자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어선원	KAL기	군·경	기타
피랍		**3,835**	3,729	50	30	26
귀환	송환	**3,310**	3,263	39	-	8
	탈북	**9**	9	-	-	-
미귀환		**516**	457	11	30	18

③ 억류자 현황(6명)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성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	○○○	○○○
억류 시기	'13.10.	'14.10.	'14.12.	'16.5월 (추정)	'16.3월 (추정)	'16.3월 (추정)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② 이산가족 현황

①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연령별 ('23.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합계
인원	11,349	12,845	6,827	3,751	2,169	**36,941**
비율	30.7	34.8	18.5	10.1	5.9	**100**

출신지역별 ('23.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합계
인원	7,305	3,794	2,155	3,309	1,125	1,140	544	17,569	**36,941**
비율	19.8	10.3	5.8	9	3	3.1	1.5	47.5	**100**

성별 ('23.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22,549	14,392	**36,941**
비율	61	39	**100**

거주지별 ('23.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	9,339	1,538	898	2,958	360	767	305	11,175	2,236	1,253
비율	25.3	4.2	2.4	8	1	2.1	0.8	30.3	6	3.4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합계
인원	1,181	634	539	1,145	934	392	149	1,138	**36,941**
비율	3.2	1.7	1.4	3.1	2.5	1.1	0.4	3.1	**100**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 연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85	–	–	–	–	65 (157)	–	30 (81)	35 (76)	–
'90	35	44	–	6	–	–	–	–	–
'91	127	193	–	11	–	–	–	–	–
'92	132	462	–	19	–	–	–	–	–
'93	221	948	–	12	–	–	–	–	–
'94	135	584	–	11	–	–	–	–	–
'95	104	571	–	17	–	–	–	–	–
'96	96	473	–	18	–	–	–	–	–
'97	164	772	–	61	–	–	–	–	–
'98	377	469	–	109 (2)	–	–	–	–	–
'99	481	637	–	200 (18)	–	–	–	–	–
'00	447	984	–	152 (392)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
'01	208	579	–	170 (493)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
'02	198	935	–	208 (616)	261 (1,635)	9 (9)	–	398 (1,724)	–
'03	388	961	–	283 (677)	963 (7,091)	8 (8)	–	598 (2,691)	–
'04	209	776	–	188 (470)	681 (5,007)	–	–	400 (1,926)	–
'05	276	843	–	95 (261)	962 (6,957)	–	–	397 (1,811)	199 (1,323)
'06	69	449	–	54 (105)	1,069 (8,314)	–	–	594 (2,683)	80 (553)
'07	74	413	–	55 (167)	1,196 (9,121)	–	–	388 (1,741)	278 (1,872)
'08	50	228	–	36 (97)	–	–	–	–	–
'09	35	61	–	23 (51)	302 (2,399)	–	–	195 (888)	–
'10	16	15	–	7 (18)	302 (2,176)	–	–	191 (886)	–
'11	3	21	–	4 (14)	–	–	–	–	–
'12	6	16	–	3 (6)	–	–	–	–	–
'13	9	22	–	3 (5)	316 (2,342)	–	–	–	–
'14	6	11	–	5 (10)	–	–	–	170 (813)	–
'15	4	26	–	1 (4)	317 (2,155)	–	–	186 (972)	–
'16	6	43	–	3 (8)	–	–	–	–	–
'17	10	46	1	1 (2)	–	–	–	–	–
'18	7	36	1	1 (1)	292 (1,996)	–	–	170 (833)	–
'19	2	16	–	1 (1)	–	–	–	–	–
'20	–	4	–	–	–	–	–	–	–
'21	–	3	–	–	–	–	–	–	–
'22	–	3	–	–	–	–	–	–	–
'23	1	2	–	–	–	–	–	–	–
'24	–	–	–	1 (3)	–	–	–	–	–
합계	**3,896**	**11,646**	**2**	**1,758 (3,421)**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 기타: 성묘 방북

부록

③ 남북 왕래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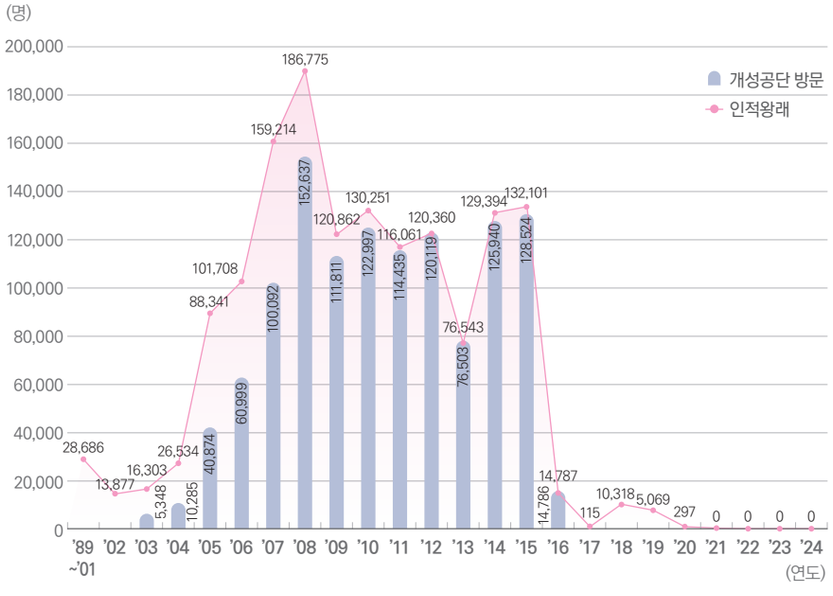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연도	'89~'01	'02	'03	'04	'05	'06	'07	'08
남→북(방북)	27,152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북→남(방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남→북(방북)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북→남(방남)	246	132	14	–	40	366	4	–
계	**120,862**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구분 \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계
남→북(방북)	52	9,509	5,069	297	–	–	–	–	1,468,433
북→남(방남)	63	809	–	–	–	–	–	–	9,163
계	**115**	**10,318**	**5,069**	**297**	**–**	**–**	**–**	**–**	**1,477,596**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④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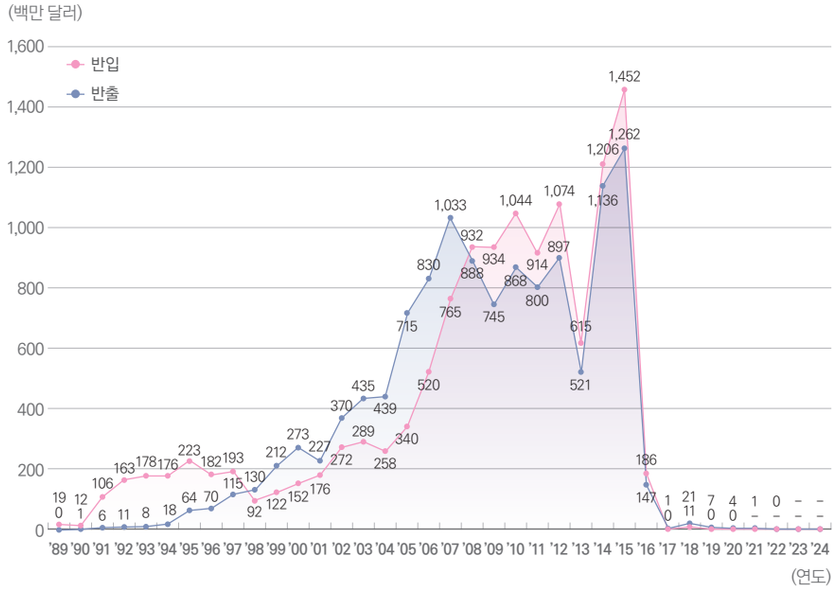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합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구분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반입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반출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합계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구분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반입	1452	186	0	11	0	0	–	–	–	–	**12,607**
반출	1262	147	1	21	7	4	1	0	–	–	**12,255**
합계	**2,714**	**333**	**1**	**31**	**7**	**4**	**1**	**0**	**–**	**–**	**24,862**

※ 반올림한 수치로, 연도별 반입/반출을 합산한 수치와 실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 달러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 '91년~'94년, '99년, '06년~'07년, '14년, '16년, '18년 수치 정규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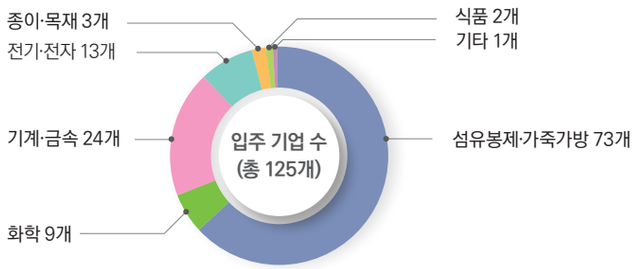
⑤ 개성공단사업 현황

※ 개성공단 통계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16.2.10.)으로 '15년 말 기준으로 작성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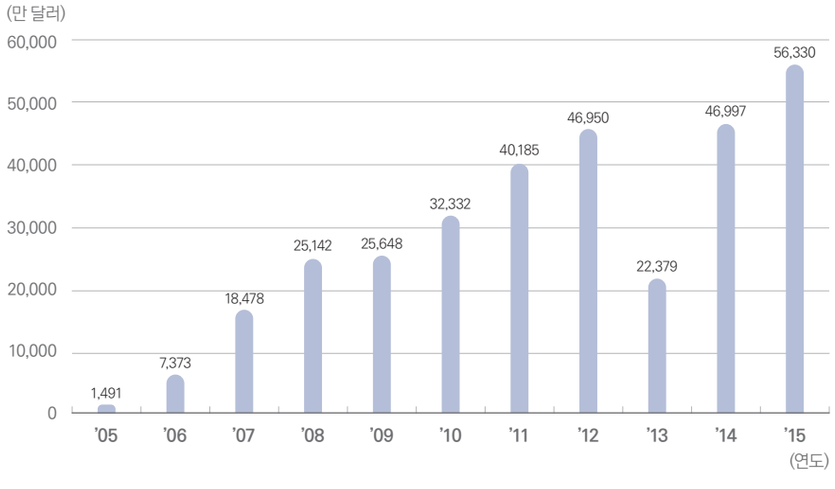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입주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330	**323,305**



⑥ 인도적 협력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무상) C	총 지원액 (A+B+C)
	무상 지원				식량 차관 B	지원액 A+B		
	당국차원 (a)	민간단체 기금지원 (b)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c)	지원액 A (a+b+c)				
'95	1,854	–	–	1,854	–	1,854	2	**1,856**
'96	–	–	24	24	–	24	12	**37**
'97	–	–	240	240	–	240	182	**422**
'98	–	–	154	154	–	154	275	**429**
'99	339	–	–	339	–	339	223	**562**
'00	944	34	–	977	1,057	2,034	386	**2,421**
'01	684	63	229	976	–	976	782	**1,757**
'02	832	65	243	1,140	1,510	2,650	578	**3,228**
'03	811	81	205	1,097	1,510	2,607	766	**3,373**
'04	949	102	262	1,314	1,359	2,673	1,558	**4,231**
'05	1,221	120	19	1,360	1,787	3,147	780	**3,926**
'06	2,000	133	139	2,273	–	2,273	709	**2,982**
'07	1,428	220	335	1,983	1,505	3,488	909	**4,397**
'08	–	241	197	438	–	438	726	**1,164**
'09	–	77	217	294	–	294	377	**671**
'10	183	21	–	204	–	204	201	**405**
'11	–	–	65	65	–	65	131	**196**
'12	–	–	23	23	–	23	118	**141**
'13	–	–	133	133	–	133	51	**183**
'14	–	–	141	141	–	141	54	**195**
'15	–	23	117	140	–	140	114	**254**
'16	–	1	1	2	–	2	28	**30**
'17	–	–	–	–	–	–	11	**11**
'18	12	–	–	12	–	12	65	**77**
'19	–	–	106	106	–	106	170	**277**
'20	–	7	118	125	–	125	23	**149**
'21	–	5	–	5	–	5	26	**31**
'22	–	6	–	6	–	6	20	**26**
'23	–	2	–	2	–	2	8	**10**
'24	–	–	–	–	–	–	–	**–**
합계	**11,258**	**1,200**	**2,969**	**15,427**	**8,728**	**24,155**	**9,286**	**33,440**

※ 세부 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에서 차이 발생
※ '23년 수치 정정

⑦ 남북회담 추진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 연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치	156	4	10	–	–	–	2	5	18	2	4	5	2	10
군사	–	–	–	–	–	–	–	–	4	2	9	6	5	3
경제	5	–	–	–	–	–	–	–	3	3	14	17	13	11
인도	111	–	–	3	–	4	1	–	2	1	3	7	2	4
사회·문화	34	–	–	–	–	–	–	–	–	–	2	1	1	6
합계	**306**	**4**	**10**	**3**	**–**	**4**	**3**	**5**	**27**	**8**	**32**	**36**	**23**	**34**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4	합계
정치	5	13	–	–	–	–	–	1	2	3	–	19	–	261
군사	4	11	2		1	1	–	–	1	–	–	4	–	53
경제	8	22	3	4	3	–	–	22	3	1	–	4	–	136
인도	3	3	–	2	4	–	–	1	1	1	–	2	–	155
사회·문화	3	6	1	–	–	–	–	–	1	–	–	7	–	62
합계	**23**	**55**	**6**	**6**	**8**	**1**	**–**	**24**	**8**	**5**	**–**	**36**	**–**	**667**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 4자 회담 12회('97년 7회, '98년 2회, '99년 3회)를 별도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연도 통계에서 제외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현황

(단위: 건)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의서 건수	40	–	2	1	–	2	1	1	18	4	23	31	20	23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4	합계
합의서 건수	10	39	5	1	1	–	8	2	3	–	23	–	**258**

⑧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①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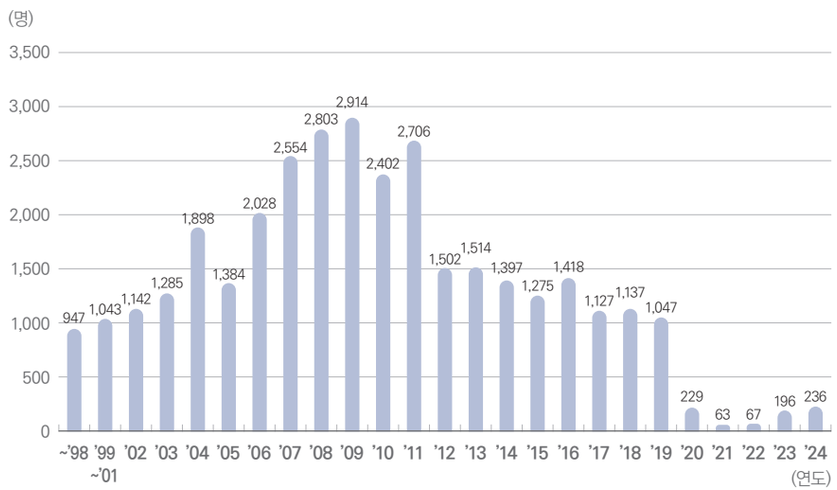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연도	~'98	'99 ~'01	'02	'03	'04	'05	'06	'07	'08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남성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여성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합계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여성 비율	77%	75%	71%	73%	76%	78%	80%	79%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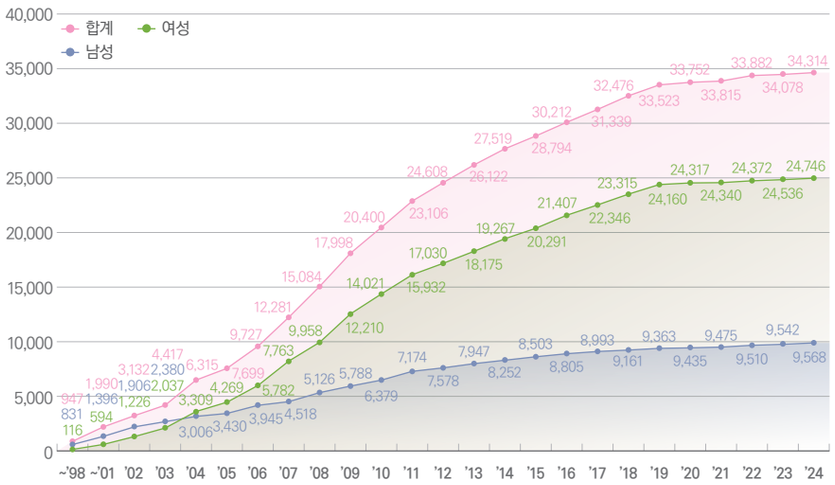
구분 \ 연도	'18	'19	'20	'21	'22	'23	'24	합계
남성	168	202	72	40	35	32	26	9,568
여성	969	845	157	23	32	164	210	24,746
합계	**1,137**	**1,047**	**229**	**63**	**67**	**196**	**236**	**34,314**
여성 비율	85%	81%	69%	37%	48%	84%	89%	72%

※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부록

입국 인원 누계



입국 당시 연령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652	1,709	2,643	2,177	1,409	605	359	9,554
여	646	2,113	7,028	7,678	4,704	1,498	1,005	24,672
합계	**1,298**	**3,822**	**9,671**	**9,855**	**6,113**	**2,103**	**1,364**	**34,226**
비율	3.8%	11.2%	28.2%	28.8%	17.9%	6.1%	4.0%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직업별 입국자 현황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학생 등	합계
남	417	726	4,208	3,221	95	83	245	559	9,554
여	143	168	9,378	12,043	1,487	226	537	690	24,672
합계	**560**	**894**	**13,586**	**15,264**	**1,582**	**309**	**782**	**1,249**	**34,226**
비율	1.6%	2.6%	39.7%	44.6%	4.6%	0.9%	2.3%	3.7%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학력별 입국자 현황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소학교 (인민 학교)	중학교 (초급, 고급)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등)	합계
남	419	135	807	5,773	864	1,149	361	46	9,554
여	405	220	1,526	17,926	2,724	1,234	518	119	24,672
합계	**824**	**355**	**2,333**	**23,699**	**3,588**	**2,383**	**879**	**165**	**34,226**
비율	2.4%	1.0%	6.8%	69.2%	10.5%	7.0%	2.6%	0.5%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해당 학력별 재학·중퇴자는 포함

출신 지역별 입국자 현황

('24.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남	225	77	1,563	79	466	379	512
여	381	93	4,575	171	662	515	359
합계	**606**	**170**	**6,138**	**250**	**1,128**	**894**	**871**
비율	1.8%	0.5%	17.9%	0.7%	3.3%	2.6%	2.5%

구분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등)	합계
남	781	4,864	276	187	47	98	9,554
여	2,135	15,112	211	289	34	135	24,672
합계	**2,916**	**19,976**	**487**	**476**	**81**	**233**	**34,226**
비율	8.5%	58.4%	1.4%	1.4%	0.3%	0.7%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부록

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현황

직업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 인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성	1,002	843	1,018	785	904	807	726	788	260	38	15	76	187
남성	361	254	262	168	198	150	116	165	97	31	21	37	16
합계	**1,363**	**1,097**	**1,280**	**953**	**1,102**	**957**	**842**	**953**	**357**	**69**	**36**	**113**	**203**

※ '23년 수치 정정

탈북아동·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 (단위: 명)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유치반	19	53	54	63	70	69	42	38	28	28
초등반	97	104	107	142	118	179	124	97	87	49
청소년반	169	232	276	220	192	198	114	106	90	68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유치반	25	36	20	23	7	-	1	5	0	**581**
초등반	46	43	49	57	19	1	-	0	5	**1,324**
청소년반	86	116	108	105	52	3	5	8	15	**2,163**

심화 및 직무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심화교육			직무교육	
	과정수	수료	자격증 취득	과정수	수료
'14	5	103	85	11	440
'15	6	117	72	10	521
'16	8	247	206	8	315
'17	7	291	251	7	290
'18	7	335	292	8	305
'19	7	385	314	8	247
'20	3	18	18	4	28
'21	6	42	40	4	128
'22	8	49	40	10	189
'23	23	195	177	5	130
'24	33	273	157	11	108

※ 화천 분소 심화교육 운영 종료('20.5.8. 남북하나재단으로 업무 이관)

③ 주택 알선 현황

(단위: 세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세대수	1,320	1,027	1,232	969	1,096	1,044	868

연도	'19	'20	'21	'22	'23	'24	합계
세대수	1,062	438	97	59	134	226	**9,572**

※ '23년 수치 정정

④ 정착금 지급 현황

2024년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기본금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 분할지급금은 분기별로 3회 지급	1인(초기 700, 분할 300)		1,000
		2인(초기 900, 분할 700)		1,600
		3인(초기 1,100, 분할 1,000)		2,100
		4인(초기 1,300, 분할 1,300)		2,600
		5인(초기 1,500, 분할 1,600)		3,100
		6인(초기 1,700, 분할 1,900)		3,600
		7인 이상(초기 1,900, 분할 2,200)		4,100
주거 지원금		1인		1,600
		2~4인		2,000
		5인 이상		2,300
지방거주 장려금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 인천 외 광역시 ㉰지역 : ㉮㉯ 외 지역	1인	㉯ 지역	160
			㉰ 지역	320
		2~4인	㉯ 지역	200
			㉰ 지역	400
		5인 이상	㉯ 지역	230
			㉰ 지역	460
정착장려금	취업장려금	6개월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500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지방) 800
		총액(최고액) 수도권 1,800, 지방 2,100		
	새출발장려금	6개월	200	
		총액(최고액) 600(200씩, 3회)		
가산금	고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800
	장애 가산금	장애정도	중증	1,540
			경증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보건복지부 고시)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개월 수 X 80 (최대 9개월)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400(세대당)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제3국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		〈226기~263기〉 자녀 1인당 X 400 〈264기부터〉 자녀 1인당 X 450 (2명 이내)

구분		기준	금액
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만 18세부터 만 24세 무연고청소년	월 20
고용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지급	임금의 1/2, 월 50만 원 한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연 600 (최고 2,400)

※ '14.11.29. 이후 입국자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으로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지원제도 폐지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남은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최대 16회) 지급(단, 장기치료가산금은 예외)

기본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인원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기본금	12,167	9,173	9,429	7,609	8,277	8,612	6,574

연도	'19	'20	'21	'22	'23	'24
인원	1,125	446	74	219	302	692
기본금	8,267	4,723	921	316	895	2,058

주거지원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인원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주거지원금	25,516	21,454	23,288	19,530	19,983	18,201	16,880

연도	'19	'20	'21	'22	'23	'24
인원	1,125	446	74	673	777	642
주거지원금	18,824	9,934	4,809	2,846	3,866	4,681

지방거주 장려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인원	744	752	555	420	443	353	414
지급액	2,323	1,806	1,172	857	952	721	828

연도	'19	'20	'21	'22	'23	'24
인원	352	201	212	122	16	10
지급액	678	511	541	325	50	25

장려금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	1,118	1,916	1,472	2,944	496	992	3,455	17,204	-	-	**6,541**	**23,056**
'13	774	1,221	952	1,904	266	532	3,304	16,608	-	-	**5,296**	**20,265**
'14	706	1,082	879	1,757	181	362	3,631	18,238	-	-	**5,397**	**21,439**
'15	516	753	733	1,466	135	270	2,844	14,272	-	-	**4,228**	**16,761**
'16	252	360	455	910	64	128	2,483	12,078	-	-	**3,254**	**13,477**
'17	98	137	202	404	12	24	2,092	10,024	-	-	**2,404**	**10,589**
'18	61	82	131	262	14	28	1,720	8,021	-	-	**1,926**	**8,393**
'19	33	46	46	92	11	22	1,620	7,542	-	-	**1,710**	**7,702**
'20	3	4	5	10	-	-	1,482	7,048	-	-	**1,490**	**7,062**
'21	2	3	2	4	1	2	1,424	7,497	-	-	**1,429**	**7,506**
'22	0	0	0	0	0	0	1,120	6,051	-	-	**1,120**	**6,051**
'23	0	0	0	0	0	0	891	4,733	-	-	**891**	**4,733**
'24	0	0	0	0	0	0	545	2,964	154	308	**699**	**3,272**

가산금

(단위: 백만 원)

구분		'13	'14	'15	'16	'17	'18
가산금	장애	243	212	140	110	80	46
	고령	795	658	602	457	327	279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717	631	570	475	385	318
	장기치료	40	43	29	10	10	5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	-	-	79
합계		**1,795**	**1,544**	**1,341**	**1,052**	**802**	**727**

구분		'19	'20	'21	'22	'23	'24
가산금	장애	135	130	88	91	86	45
	고령	205	206	194	161	131	90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218	147	85	36	27	14
	장기치료	19	10	20	7	9	0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223	394	496	450	322	147
합계		**800**	**887**	**883**	**745**	**575**	**296**

고용지원금

(단위: 개, 명, 백만 원)

연도	'13	'14	'15	'16	'17	'18
업체수	2,824	2,659	2,670	2,084	1,552	964
인원	4,206	3,966	3,501	2,679	1,872	1,089
지급액	15,742	14,615	13,304	10,268	7,393	4,299

연도	'19	'20	'21	'22	'23	'24
업체수	552	245	77	37	7	0
인원	612	269	81	37	7	0
지급액	2,346	978	277	52	8	0

교육지원금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분	'13	'14	'15	'16	'17	'18
대학수	200	253	218	239	232	231
인원	1,704	1,894	2,006	1,934	1,844	1,885
지급액	3,747	4,212	4,555	4,216	4,120	4,154

구분	'19	'20	'21	'22	'23	'24
대학수	235	227	230	213	203	202
인원	1,889	1,938	1,944	1,857	1,680	1,540
지급액	4,329	4,410	4,855	5,050	4,663	4,894

⑨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①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08년 이전	'09	'10	'11	'12	'13
인원	550,870	71,944	68,946	119,736	133,284	185,194

구분	'14	'15	'16	'17	'18	'19
인원	97,830	145,363	161,677	169,096	557,096	718,233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인원	838,778	1,009,203	861,887	855,336	860,795	**7,405,268**

②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19	'20	'21	'22	'23	'24	합계
인원	665,483	887,608	972,852	997,537	1,082,349	1,078,847	**5,684,676**

※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의무화

③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인원	3,401	38,226	39,565	38,242	39,999	23,289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인원	5,814	1,986	9,044	28,891	38,257	**266,714**

⑩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①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연도	표결결과 (찬성:반대:기권)	우리 입장
인권위원회		
'03(59차)	28:10:14	불참
'04(60차)	29:8:16	기권
'05(61차)	30:9:14	기권
인권이사회		
'08(7차)	22:7:18	찬성
'09(10차)	26:6:15	공동제안
'10(13차)	28:5:13	공동제안
'11(16차)	30:3:11	공동제안
'12(19차)	무투표	공동제안
'13(22차)	무투표	공동제안
'14(25차)	30:6:11	공동제안
'15(28차)	27:6:14	공동제안
'16(31차)	무투표	공동제안
'17(34차)	무투표	공동제안
'18(37차)	무투표	공동제안
'19(40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43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1(46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2(49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3(52차)	무투표	공동제안
'24(55차)	무투표	공동제안

② 유엔 총회

연도	표결결과(찬성:반대:기권)		우리 입장
	제3위원회	본회의	
'05(60차)	84:22:62	88:21:60	기권
'06(61차)	91:21:60	99:21:56	찬성
'07(62차)	97:23:60	101:22:59	기권
'08(63차)	95:24:62	94:22:63	공동제안
'09(64차)	97:19:65	99:20:63	공동제안
'10(65차)	103:18:60	106:20:57	공동제안
'11(66차)	112:16:55	123:16:51	공동제안
'12(67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3(68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4(69차)	111:19:55	116:20:53	공동제안
'15(70차)	112:19:50	119:19:48	공동제안
'16(71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7(72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8(73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9(74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75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1(76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2(77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23(78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24(79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⑪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결의안	계기	주요 내용
1718호 ('06.10.14.)	1차 핵실험 ('06.10.9.)	• 7대 무기류·대량살상무기 품목·사치품 통제, 금수품 관련 기술지원 금지 • 대량살상무기 관련 개인·단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09.6.12.)	2차 핵실험 ('09.5.25.)	• 모든 무기(소형무기 제외) 관련 물자 통제 •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2087호 ('13.1.22.)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12.12.)	• 군사전용 의혹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catch-all) 적용 •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시 중대한 조치 천명
2094호 ('13.3.7.)	3차 핵실험 ('13.2.12.)	•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 내 북한 행·발 또는 북한이 중개·알선한 화물 검색 의무화, 공해상 선박이 검색 거부 시 자국 내 입항 거부 의무 •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항공기 자국 진입 금지 • 제재대상 개인·단체와 관련된 자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적용 • 금지활동에 기여 가능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포함 금융 및 기타 자산·재원 이전 금지 의무화 • 제재 회피에 기여 가능 무역 및 공적 금융지원 금지
2270호 ('16.3.2.)	4차 핵실험 ('16.1.6.)	• 석탄·철·철광 수출 제한(민생용 제외), 금·희토류 등 광물 수출 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등 • 북한 행·발 화물 전수 조사,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및 제재대상 선박의 이착륙·영공통과/입항 금지, OMM 선박 자산동결 • 북한 은행 해외지점 개설 금지
2321호 ('16.11.30.)	5차 핵실험 ('16.9.9.)	• 석탄 수출 상한제, 은·동·아연·니켈 및 조형물 금수 •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화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및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대북무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2356호 ('17.6.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17.5.29.)	• 제재 대상(개인 14명, 단체 4개) 추가 지정
2371호 ('17.8.5.)	탄도미사일 발사 ('17.7.4, 7.28.)	• 북한의 석탄·철·철광석·해산물·납·납광석 전면 금수(원산지 무관) • 북한 해외 노동자 수 동결(제재위 승인 시 예외) • 신규 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 금지(제재위 승인 시 예외) • 제재위가 제재 선박 지정, 회원국은 입항 불허(제재위가 인도적 사유 결정 시 예외) • 대금정산 금지,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 인터폴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Special Notice) 발부 요청
2375호 ('17.9.11.)	6차 핵실험 ('17.9.3.)	• 북한의 섬유 금수(원산지 무관, 유예기간 90일) •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금지) • 신규·기존 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 금지(120일 내 폐쇄)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원유 공급량 현 수준 동결(결의 채택일 기준 과거 1년간 공급량 초과 금지) △정제유 공급량 감축(상한 연 200만 배럴)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액화천연가스(LGL) 공급 금지 • 공해상 선박 검색 거부 시 제재위가 등록취소 지정 •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 시 사안별로 예외 조치 가능
2397호 ('17.12.22.)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7.11.29.)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강화 – 원유 공급 연 400만 배럴로 제한, 정제유 공급 연 50만 배럴로 제한 • 북한의 식료품·농산품·기계류·전기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의 수출 금지 (원산지 무관, 결의 채택 이전 서면계약의 경우 유예기간 30일) • 북한의 수산물 수출 금지에 조업권 거래 금지 포함 • 산업용 기계류·운송수단·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대북 수출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해상차단 강화 – 회원국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의무화 – 회원국에 영해에 있는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권한 부여 – 북한에 대한 모든 선박(신규, 중고)의 이전 금지 • 제재 대상(개인 16명, 단체 1개) 추가 지정 •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 시 사안별로 예외 조치 가능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① 기금 조성 실적

(단위: 백만 원)

연도	정부 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91	25,000	–	–	237	**25,237**
'92	40,000	–	–	5,118	**45,118**
'93	40,000	3	–	4,778	**44,781**
'94	40,000	1	–	9,387	**49,388**
'95	240,000	119	–	14,589	**254,708**
'96	100,000	132	–	18,409	**118,541**
'97	50,000	288	–	27,874	**78,162**
'98	–	–	–	40,280	**40,280**
'99	–	3	149,831	23,013	**172,847**
'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09	–	56	81,000	74,354	**155,410**
'10	–	–	875,000	51,238	**926,238**
'11	–	2	104,400	38,276	**142,678**
'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19	100,000	–	203,000	6,574	**309,574**
'20	150,000	11	548,600	22,524	**721,135**
'21	100,000	100	237,000	4,589	**341,689**
'22	100,000	12	105,500	3,313	**208,825**
'23	57,200	–	430,000	7,899	**495,099**
'24	100,000	900	520,000	6,099	**626,999**
합계	**5,747,714**	**3,758**	**10,088,774**	**1,031,088**	**16,871,334**

② 기금 사용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주민왕래지원	–	–	–	–	–	–	–	–	–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이산가족	–	6	–	–	–	–	–	0.1	4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경수로 대출	–	–	–	–	–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원금상환	–	–	–	–	–	–	–	–	–
이자상환	–	–	–	–	–	–	–	–	–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합계	**25**	**9**	**3**	**3**	**1,826**	**106**	**193**	**876**	**345**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민왕래지원	3	3	237	11	11	38	53	17	27
문화·학술·체육협력	21	1	–	7	32	75	74	69	38
이산가족	28	13	20	30	32	133	99	269	182
인도적 지원(무상)	977	976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인도적 지원(유상)	867	190	967	1,561	1,020	1,793	39	1,405	–
남북경제협력(무상)	146	898	368	763	760	2,045	1,521	1,725	1,101
남북경제협력(유상)	5	461	667	547	814	568	710	1,400	366
경수로 대출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원금상환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이자상환	190	391	626	701	795	838	983	1,007	1,012
기금관리비	3	5	6	8	12	16	18	19	21
합계	**5,499**	**5,941**	**8,624**	**10,965**	**8,671**	**10,419**	**13,441**	**13,513**	**3,844**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주민왕래지원	–	–	–	–	–	5	–	–	1
문화·학술·체육협력	30	21	26	23	21	28	61	23	36
이산가족	22	20	1	4	21	31	52	16	7
인도적 지원(무상)	294	192	102	24	132	148	122	7	13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415	177	167	421	2,037	441	283	4,489	600
남북경제협력(유상)	240	453	130	221	746	223	36	760	27
경수로 대출	–	–	–	–	–	–	–	–	–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상환	1,159	9,306	1,086	5,161	6,388	3,882	1,836	2,982	8,470
원금상환	100	8,200	–	4,000	5,300	2,916	905	2,070	7,650
이자상환	1,059	1,106	1,086	1,161	1,088	966	931	912	820
기금관리비	39	29	27	28	30	30	30	26	25
합계	**2,199**	**10,198**	**1,539**	**5,882**	**9,375**	**4,788**	**2,420**	**8,303**	**9,179**

구분	'18	'19	'20	'21	'22	'23	'24	합계
주민왕래지원	25	0	–	–	–	–	–	**431**
문화·학술·체육협력	75	37	42	34	34	35	35	**887**
이산가족	51	44	12	23	10	10	17	**1,157**
인도적 지원(무상)	27	314	139	17	34	8	8	**16,954**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1,914	329	223	215	435	151	271	**21,957**
남북경제협력(유상)	26	26	26	23	267	20	–	**9,437**
경수로 대출	–	–	–	–	–	–	–	**13,744**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상환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5,712	**97,204**
원금상환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77,893**
이자상환	636	580	570	461	431	449	512	**19,311**
기금관리비	28	23	23	23	23	23	22	**559**
합계	**5,565**	**3,384**	**6,522**	**3,166**	**2,289**	**4,996**	**6,064**	**170,172**

※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 개별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과제	실천과제	주요 내용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1.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처 • 원칙 있는 남북대화 재개 모색 및 교류협력 질서 확립
	2. 자유평화 통일 비전 제시	• 자유, 인권 등 보편 가치 지향 통일미래 담론 구체화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실현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3. 북한 바로 알리기	• 북한이해 제고 사업 추진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북한 정보 분석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4.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 통일·대북정책 국민참여 기반 마련 • 우호적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정비 및 인식 개선 • 북한이탈주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지원 강화
	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통일관 확립 • 참여·소통 통일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북한인권 실태 공유·확산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노력 강화
	2.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 계기 시 남북 간 핵심 현안 의제로 제기 •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지속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최우선 해결 노력
	3.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 북한 취약계층 지원 우선 실시 •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인도적 협력방안 모색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대비 협력기반 조성

찾아보기(INDEX)

*영어와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정리

ㄱ

강원권 통일+센터(강원센터) 138, 142~145
개성공단 182, 239~244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249
겨레말큰사전 233, 248~249
경기권 통일+센터(의정부) 144
9.19 군사합의 19~20
국군포로 51~57, 68~76, 157~159
국립북한인권센터 42~50, 166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76
국립통일교육원 186~216, 236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139, 176
국제 한반도 포럼(GKF) 139, 163~165

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41~24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4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80~183, 239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180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6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43, 61, 181~182
남북이산가족찾기 60~65
남북출입사무소 232, 241~242
남북통합문화센터 114, 127~131
남북하나재단 99~114, 126, 134
남북협력기금 139, 179~183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180
남북회담 175, 232~236
남북회담사료 232~236
납북자 43, 51~57, 68~78, 157~164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72
누리소통망(SNS) 151~154
누리집 83, 151~154, 175

ㄷ

담대한 구상 15, 21~23, 23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20
대북제재 위반 사례집 245
대북제재 톺아보기 245
대북지원정보시스템 83
대화협의체 15, 21~23, 33~34, 232~234
디지털 아카이브 174~175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82

ㅁ

마음건강센터 98~99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 77~78
미래행복통장 109, 119~125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7~18, 25~30

ㅂ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139, 171~17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88, 132~133
북한이탈주민의 날 86, 105~109, 126~13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8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52, 9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88, 13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32~13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132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87, 133
북한인권결의안 51
북한인권 국제대화 43~58, 73, 157~158
북한인권기록센터 55~59
북한인권법 44~45, 55~56
북한인권보고서 42~46, 56~59
북한인권 상호대화 42~47
북한인권재단 44~45
북한인권정책협의회 45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51~54, 159
북한인권증진위원회 45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45
북한인권홍보대사 42~46, 53~58
북한자료센터 139, 173~176, 236
북한정보포털 139, 172~173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67
북한주민접촉신고 79

ㅅ

사회적응교육 88~92, 100~108
사회통일교육 193, 216
세송이물망초 43, 69~73

ㅇ

억류자 43, 51~57, 68~76, 157~164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 123
워싱턴선언 22, 53
유니투어(UniTour) 186~192
UniTV 150~155, 168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52, 59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20~23, 44, 59
유엔인권이사회 51~53, 73~75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8
이산가족 43, 51~67, 159
이산가족법 61, 65
이산가족 영상편지 62~64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181~182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62
이산가족의 날 43, 61~66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60
인천통일+센터(인천센터) 144

ㅈ

적대적 두 국가관계 14~23, 240
전시납북자 68, 76~78
전후납북자 68~72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72
정착금 88, 110

부록

지역적응센터 87~88, 108, 133
지역통일교육센터 187, 202, 211

ㅊ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97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101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187, 205
충청권 통일+센터(홍성) 144

ㅋ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 37

ㅌ

통일공공외교 139, 163~169
통일관 187, 212~219
통일교육 선도대학 202~212
통일교육연구센터 203
통일교육 연구학교 202, 212
통일교육위원 187~191, 212~216
통일교육 주간 187, 197~203, 209
통일교육지원법 219
통일교육협의회 202, 216
통일NOW 154~155
통일로가요 150~151
통일문화행사 170, 213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6, 36~38
통일법제추진협의회 139, 177
통일+센터 142~147, 191, 219
통하나봄 138~142, 223

ㅍ

판문점 견학 181~183, 193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193
8.15 통일 독트린 15~38, 157~163, 232~234
평화경제특구법 238

ㅎ

하나둘학교 94~96
하나마음쉼터 101, 114
하나센터 97~106, 112~119, 132~134
하나원 52~56, 88~114, 191
하나의원 96~97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38, 166
한반도 국제 포럼 33, 38, 73, 139, 16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87~192, 221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22
핵협의그룹(NCG) 22
호남권 통일+센터(호남센터) 144~146
화천 분소(제2하나원) 91, 97~102, 114

2025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

인쇄일 2025년 5월
발행일 2025년 5월
발행처 통일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3
팩스 02-2100-5851